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결과

2002.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목 차 ◆

I .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개요	1
1.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1
2. 사전조정 대상	2
3. 사전조정 심의원칙,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	3
 II .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11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11
2.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	13
3. 심의위원회별 투자방향	19
 III .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결과	22
1. 심의결과 종합	22
가. 심의결과 종합	22
나. 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23
다. 부처별 심의결과	27
2. 원천·공공·복지연구사업 심의위원회	30
가.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기준	30
나. 심의결과 종합	31
다. 사업별 심의 결과	35
3.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61
가.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기준	61
나. 심의결과 종합	62
다. 사업별 심의 결과	64
4. 연구기반조성사업 심의위원회	76
가.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기준	76
나. 심의결과 종합	77
다. 사업별 심의 결과	80
5. 연구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99
가.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기준	99
나. 심의결과 종합	100
다. 기관별 심의 결과	102
 IV . 정책건의	127
 [별첨]	
1. 부처별 우선순위 설정결과	129
2. 사전조정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34
3. 심의 주안점	139

I.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개요

1.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효과적 사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
 -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은 5조 1,583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서 일반 회계기준 정부예산 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음.
-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처연구개발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중복투자 방지 등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필요성 대두
 - 범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점 투자방향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자원의 전략적 투자는 중요한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관련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를 설치하였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항 5호)
 -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과학기술시책 및 과학기술관련 예산에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0조 제2항)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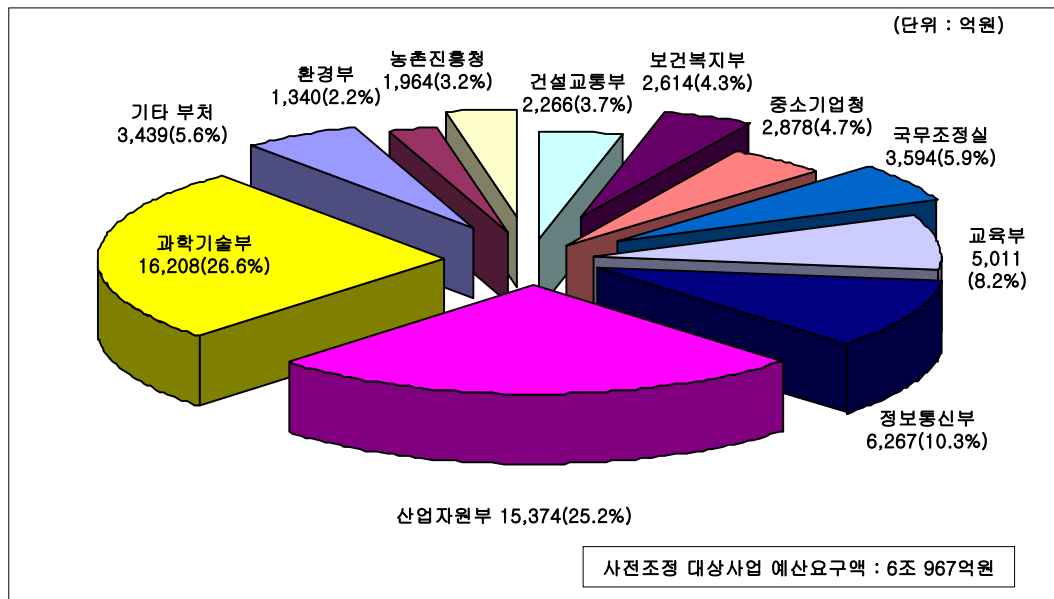
-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실시(1999년)
 - 대상 : 18개 부처 총 122개 사업(계속사업 110개, 신규사업 12개)
 - 제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심의('99.7.12.)후 기획예산처에 통보('99.7.15.)

-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실시(2000년)
 - 대상 : 19개 부처 총 179개 사업(계속사업 155개, 신규사업 24개)
 - 제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심의('00.7.13.) 후 기획예산처에 통보('00.7.15.)
-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실시(2001년)
 - 대상 : 19개 부처 총 172개 사업(계속사업 153개, 신규사업 19개)
 - 제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심의('01.7.18.) 후 기획예산처에 통보('01.7.20.)

2. 사전조정 대상

- 정부예산 중 기획예산처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으로 분류한 연구개발사업과 정부기금(정보화촉진기금,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인문사회계 연구사업, 정보화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비연구개발사업
 - 국방부 연구개발사업 중 비밀로 분류된 사업
 -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인건비, 간접비, 시설비, 차관원리금 등 경직성 경비
 - 단,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신규시설사업은 대상에 포함
 -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기획·관리,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단순보조금 등
 - 각 부처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관고유사업
- 2003년도 사전조정 대상사업 : 19개 부처 173개 사업
 - 계속사업 153개, 신규사업 20개
- 부처별 사전조정대상사업의 예산요구액
 - 사전조정 대상 173개사업의 예산요구액은 기금을 포함하여 총 6조 967억원 규모로 이중 계속사업의 경우 5조 8,835억원을 신규사업의 경우 2,132억원을 요구하고 있음.
 - 부처별로는 과학기술부가 1조 6,208억원을 요구하여 전체 요구액중 26.6%를, 산업자원부가 1조 5,374억원을 요구하여 전체 25.2%를 차지하는 등 2개 부처의 요구액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이 전체 요구액의 76.2%(4조 6,453억원)를 차지

<그림 1-1> 2003년도 사전조정 대상사업의 부처별 예산요구액 분포



주1 :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의 예산요구액에는 각각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512억원)과 정보화촉진기금(5,984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1,161억원)이 포함

주2 : 기타에는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산림청, 식의약청, 철도청이 포함

3. 사전조정 심의원칙,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

가. 심의원칙

- 심의위원회는 차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의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 추진방향 및 부문별 추진목표, 조사·분석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심의된 주요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조정시 우대하여 반영
- 심의조정위원회의 우선순위 조정 및 심의결과 확정은 2003년도 중점 투자방향 및 사전조정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한정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
- 연구사업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4개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진행

심의위원회	분 류 기 준
원천·공공·복지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 중장기 미래원천 및 핵심기초연구를 위한 이론적·실험적 연구사업 ○ SOC, 에너지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 환경보호, 의료 등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개발 연구사업
산업기술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 상용화를 목표로 한 단기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중·장기적으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핵심기술개발 및 응용 연구사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심의위원회	○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및 대학·대학원 중심의 육성·지원사업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공동연구시설 등 연구지원사업
연구기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 국공립연구기관 및 각 부처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연구사업 등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관고유사업 등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관고유사업 등 ○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관고유사업 등

- 1,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 1차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별 정성적 심의의견서 작성
 - 2차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설정, 중복사업 조정의견 및 심의의견서 확정

나. 심의방법

□ 사전조정 심의단위

- 연구개발예산 세세항 단위의 연구사업을 기본단위로 하되,
 - 세세항 단위의 연구사업이 다양한 하위사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하위 단위의 연구사업을 평가단위로 심의
 -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통합평가가 가능한 사업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통합단위로 평가
 - 국공립 및 출연(연)은 기관별 1개 단위 연구사업으로 평가하되, 신규시설 사업은 별도의 정성적인 심의의견을 제시

□ 심의항목

- 심의항목은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 계획의 반영정도,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예산운영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항목은 다음 표와 같음.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지원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1. 사업추진의 필요성 -정부지원의 타당성 -사업목표 및 내용의 중복여부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1.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 정책·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 계획)의 반영정도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2.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 정책·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 계획)의 반영정도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3.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가능성 정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정책목표달성의 기여도 및 타 사업에의 파급효과	1.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 정책·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 계획)의 반영정도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기관임무의 적절성 및 부합성
2.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사업선정의 전략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4.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사업선정의 전략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2.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사업선정의 전략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사업기획 및 관리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3. 예산운용의 적정성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재원분담의 합리성 -지원방식의 적절성(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5. 예산운용의 적정성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재원분담의 합리성 -지원방식의 적절성(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3. 예산운용의 적정성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재원분담의 합리성 -지원방식의 적절성(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예산배분의 적절성
4.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6.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4.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5. 조정사항 -사업간 중복여부 및 연계추진의 필요성 -전년도 심의의견의 반영정도 -조사·분석·평가결과	7. 조정사항 -사업간 중복여부 및 연계추진의 필요성	5. 조정사항 -사업간 중복여부 및 연계추진의 필요성 -전년도 심의의견의 반영정도 -조사·분석·평가결과

□ 사전조정 심의방법

○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공통)

- 연구사업별로 2003년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심의항목 및 기준에 따른 정성적 심의의견서를 작성
- 정성적 심의의견을 바탕으로 심의항목별 3등급으로 구분
- 각 연구사업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신규사업의 경우 적극지원필요, 지원필요, 재검토요망) 등의 예산 편성에 대한 조정의견과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심의위원회 소관 사업수를 고려하여 각 조정의견별 3 : 4 : 3 비율을 적용하여 우선순위 설정
 - 단, 신규사업의 경우 조정의견별 비율은 심의위원회에서 자율 결정
- 특기사항으로 사업간 중복, 연계·통합, 사업 재검토 등 권고 의견과 사업별 개선 방향 제시

○ 계속사업 심의

- 계속사업중 총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과제를 추가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신규과제 추가 이유 및 타당성」을 심층 검토
 - 다만, 신규추가된 과제가 해당 사업의 목적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심의
- 국회의 예산심의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인정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전년도 사전조정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심의
 - 정밀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
- 예산요구액이 전년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은 예산요구서에 첨부된 「증액 사유」를 심층검토
 - 증액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

○ 신규사업 심의

- 2003년도 신규계획사업은 계속사업과 분리하여 심의
 -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사업내용에 대한 심층검토 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심의의견을 제시
- 2003년도 신규계획사업중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상인 사업의 경우 「연구기획보고서」를 제출 받아 심의
 - 연구기획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조 5항에 규정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심의안'의 내용을 포함.

○ 연구기획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조 5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 소요자원의 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소관 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3조 5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연구기획보고서」의 인정여부를 심의·결정
- 연구기획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 비첨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의 결여로 판단하여 심의에서 제외
- 해당연도 종료사업이 신규사업의 형태로 차년도에 요구될 경우 신규사업으로 심의
- 신규사업화에 따른 「재추진 사유 및 타당성」을 심층 검토

○ 중복투자사업의 조정

- 사업간 중복 또는 연계 필요 사업이 도출되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의견을 권고
- ‘중복투자’라는 심의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사업통합 또는 연계, 사업추진 주체 일원화 등 구체적인 조정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권고의견 제시
- ‘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 등 구체적인 조정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권고의견 제시

○ 중복성 개념

- 중복여부 판단 요소: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 4개 요소가 모두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 추진방법은 다르지만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 추진방법과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사업목적과 지원분야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가능성 있음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조정위원회 >

○ 기 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설정방향 검토
- 「사전조정심의위원회」별 사전조정결과 조정 및 확정

○ 위원회 구성(총 9인)

- 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1인
- 부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1인
- 위 원 : 총 7인
 - 「각 사업별 심의위원회」 위원장 4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연구개발 전문위원회 위원장 2인
 - 간사위원 :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해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종합조정지원단」의 단장이 수행

< 사업별 심의위원회 >

○ 기 능

-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요구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 및 세부 개선방안 도출

○ 심의대상사업별 위원구성(4개 분야)

- ① 원천·공공·복지연구사업 ② 산업기술연구사업
- ③ 연구기반조성사업 ④ 연구기관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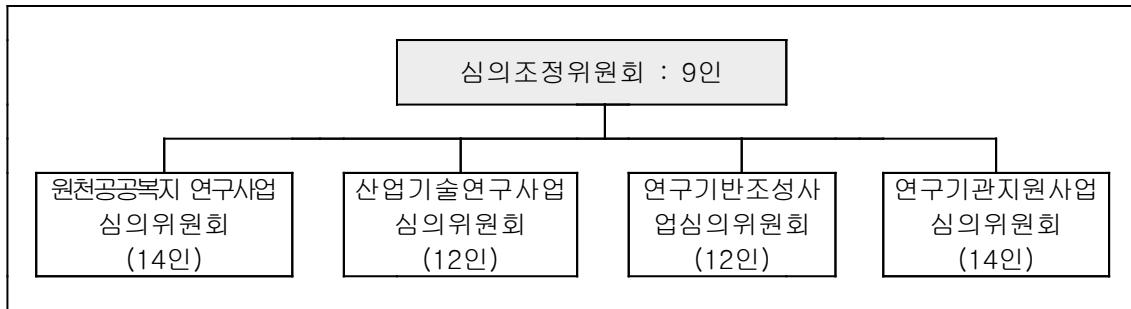
○ 위원 구성(52명)

- 국과위 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우주개발전문위원회/나노기술전문위원회/바이오기술전문위원회 민간위원
- 11개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

○ 위원회별 위원 구성

- 위원장 : 국과위 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 부위원장 :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명
- 위 원
 - 각 위원회별 12~14인으로 구성
 - 각 민간위원은 전문성 및 전년도 심의위원회 소속 등을 고려하여 구성
 - 각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1~2인은 각각의 소관 심의위원회에 위촉

- 간사 : 「종합조정지원단」 중 각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배정



다. 심의절차

- 추진계획 수립·통보(2001.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 대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부처 합의 하에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
- 사전조정 심의위원회 구성(2002. 3)
 - 심의조정위원회 9인 및 4개 심의위원회 52인으로 구성
- 심의조정위원회 개최(2002.3 ~ 7. 8차례)
 - 연구개발사업 정책목표의 성공적 수행 및 연구개발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 연구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투자방향"을 설정
 - 심의위원회 운영 원칙 및 심의방법 등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지침" 수립
 - 200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의 심의반영 방법 및 심의기준 설정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정방법 논의
- 심의위원회 1차 전략회의 개최 (2002.4.30)
 - 사전조정 시행계획 설명 및 계속사업설명회 참여 방안, 사업별 중점 검토위원 선정 등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예산요구서 접수
 - 2002년 5월말까지 관계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 접수
- 2차 전략회의 및 신규사업·연구기관지원사업설명회 개최 (2001.6.10 ~ 11)
 - 사전조정 심의지침 및 추진 일정 설명
 - "2003년도 중점 투자방향" 설명 및 위원회별 반영 방법 논의

- 심의위원회별 운영방안 논의
- 2003년도 신규사업, 2002년도 신규사업 및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등의 사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심의위원회 1차 심의회의 (2002.6.11-6.12)
 - 사전조정 대상사업의 항목별 검토 및 정성적 심의의견서 작성
- 심의위원회 2차 심의회의 (2002.6.17-6.19)
 - 정성적 심의의견을 바탕으로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및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위원회별 심의의견서 확정 및 심의결과보고서 작성
- 최종심의조정위원회 개최 (2002.7.2)
 - 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및 중복·정밀검토사업 검토 결과의 조정·확정

라. 심의기준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정부지원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의 시의 적절성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중복 여부
○ 국가정책·환경변화의 반영	- 중장기 계획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 사업목적·추진내용의 적절성	- 사업선정의 전략성 및 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 - 사업내용구성, 추진체계, 추진방법의 적절성
○ 예산운용의 적정성	-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 자원분담의 합리성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연구의 수행 및 개발능력 측면의 실현 가능성
○ 조정사항	- 사업목적, 추진방법 등에 따른 중복여부 및 연계 추진의 필요성 - 2002년 사전조정 심의결과의 반영정도 - 2001년도 조사·분석·평가 결과

※ * 신규사업만 적용되는 심의항목임

II .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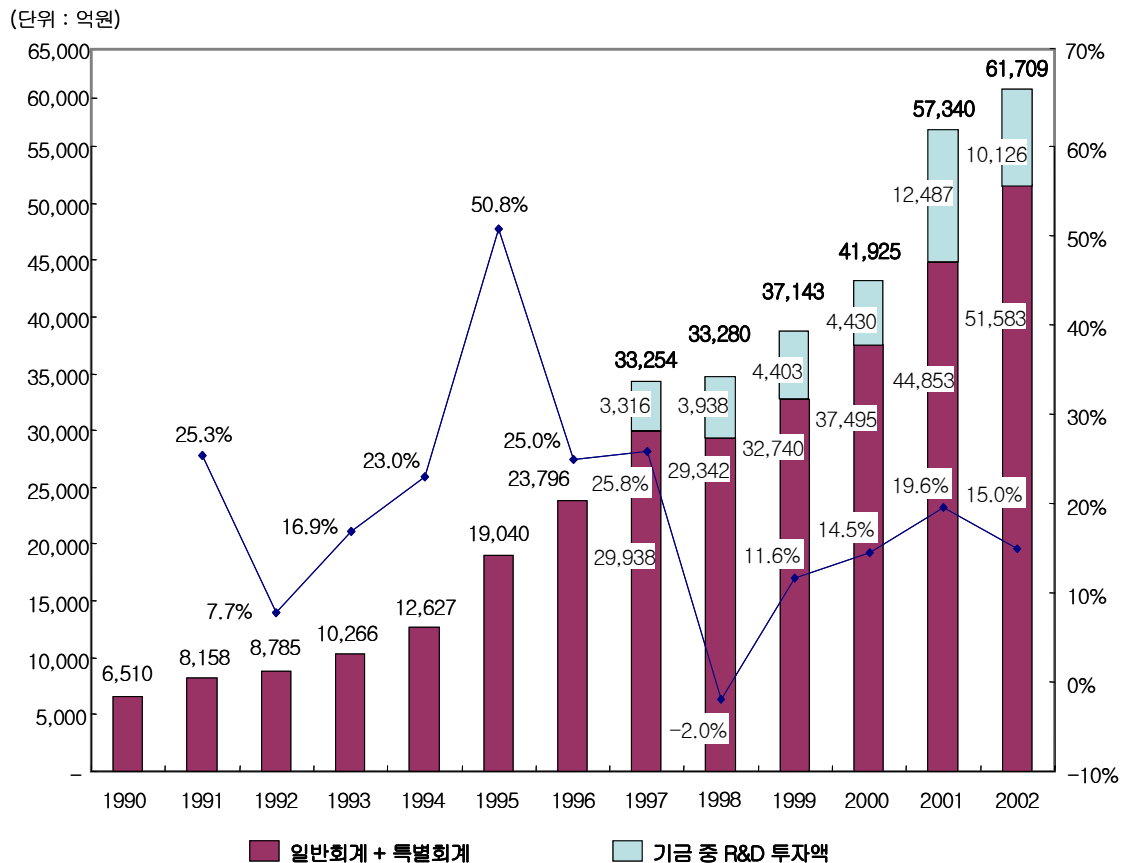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 1999~2002년 동안 일반회계 기준 정부 예산은 연평균 8.2%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중 연구개발예산은 연평균 17.3% 증가

○ 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에 특별회계를 포함할 경우 연평균 16.4% 증가

○ 정보화촉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할 경우 연평균 18.4% 증가

<그림 II-1> 정부연구개발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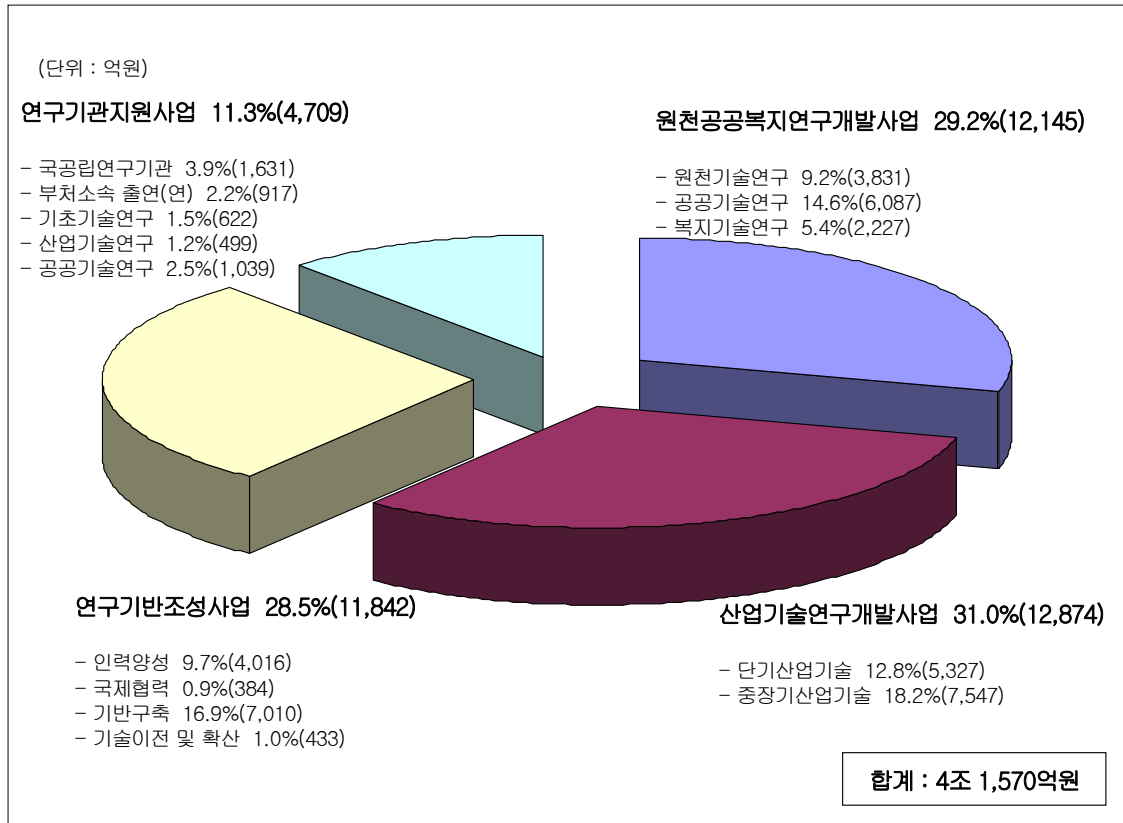
□ 2002년도 사전조정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4조 1,570억원

○ 이는 2002년도 정부의 총 연구개발투자액(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¹⁾ 6조 1,709억원의 67.4%에 해당

1) 2002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정보화촉진기금(7,453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1,505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1,168억원)을 포함

○ 심의위원회별로 보면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31.0%(1조 2,874억원), 원천·공공·복지연구개발사업 29.2%(1조 2,145억원), 연구기반조성사업 28.5%(1조 1,842억원), 연구기관지원사업 11.3%(4,709억원)를 차지

<그림 II-2> 사전조정 대상사업의 심의위원회별 투자 현황



2.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

가. 중점 투자방향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투자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예산 확대의 기조 유지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둠
-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한정된 연구개발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전조정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 설정
- 「선택과 집중」,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 및 「중복투자방지」 등을 통한 선별적·전략적 집중투자로 효율 극대화

■ 2002년 ~ 2006년간 총 정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35조원대로 설정하여 과거 5년 기간보다 배증(『과학기술기본계획』)

-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 및 성과가 향상되었으나 핵심기술 및 미래 신기술 확보를 위한 시스템 및 역량은 취약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 필요
- 향후 5년간은 선택적 집중에 의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역점을 둠
- 투자재원은 정부연구개발예산 및 기금·특별회계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 정부연구개발자원을 미래유망 신기술, 기초연구 및 공공복지기술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
 - IT, BT, NT 등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공공복지 수준 향상과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투자의 점진적인 확대
 -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하부구조,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를 강화

나. 심의위원회별 투자 우선순위

□ 기본방향

- 「과학기술기본계획」, 「200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 등에 근거하여 사전조정 심의위원회간 투자우선순위 설정

□ 중점투자방향

- 연구기관의 역할정립, 안정성 제고, 연구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연구기관 지원 강화
 - 기관의 고유 연구분야에 대한 기반구축, 기초연구 분야의 중점 투자로 국가연구소로서의 연구기관 역할 강화
 - 출연(연)의 안정성 제고 및 연구원의 사기진작
-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 연구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 기초 및 미래원천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다.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 기본방향

-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2006년까지 일반회계기준 정부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대학 및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 기초과학육성을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배정
 -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연구를 확대하여 산업체의 기초연구분야 강화 및 대학연구투자 확대

□ 중점투자방향

- 2003년도 연구개발예산중 기초연구 비중을 20% 수준으로 확대
 -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초연구 및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 미래유망신기술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

라.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투자방향

【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투자 방향 】

□ 기본방향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투자 계획에 의하면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에 대한 전략적 집중 투자를 제시
 -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투자 계획이 부문별 투자계획 중 가장 높음

○ 미래유망 신기술의 핵심기술역량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IT : 차세대 정보통신 원천기술의 전략적 우위 선점
- BT : 21세기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기술 개발
- NT :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국 진입 교두보 확보
- ST :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기술 독자개발
- ET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분야 핵심기술 확보
- CT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컨텐츠 핵심기술력 확보

○ 신기술 접목을 통한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전통주력산업과 IT의 접목기술 개발
- 피부재생·미백 화장품 소재, 고생산 축산·품종기술, 신섬유소재 처리기술, 생물학적 오염처리기술 등 전통산업과 BT의 접목기술 개발
- 철강조직의 강도를 5~7배 향상시킨 초철강 개발, 복합사 및 고감성 소재 등 나노기술 및 감성공학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및 소재개발
- 정보통신산업 유망분야·품목의 전략적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정보 통신 부문 수출 1,500억 달러 및 기술료 수입 100억원 이상 달성
- 핵심 전자부품의 원천기술, 핵심기술 및 기업화 기술 집중개발
-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시스템 복합기술 개발
- 시스템IC기반기술, 미래형자동차기술, 차세대 소재성형기술, 생리활성 화학 물질 등 주력산업의 핵심 기반기술 개발

□ 중점투자방향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 기조를 유지

- 대규모 투자, 높은 위험부담 등 신기술분야 특성상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요구
- 장래의 국가 기반기술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단계적·체계적 지원 필요

【 미래유망 신기술분야간 투자 우선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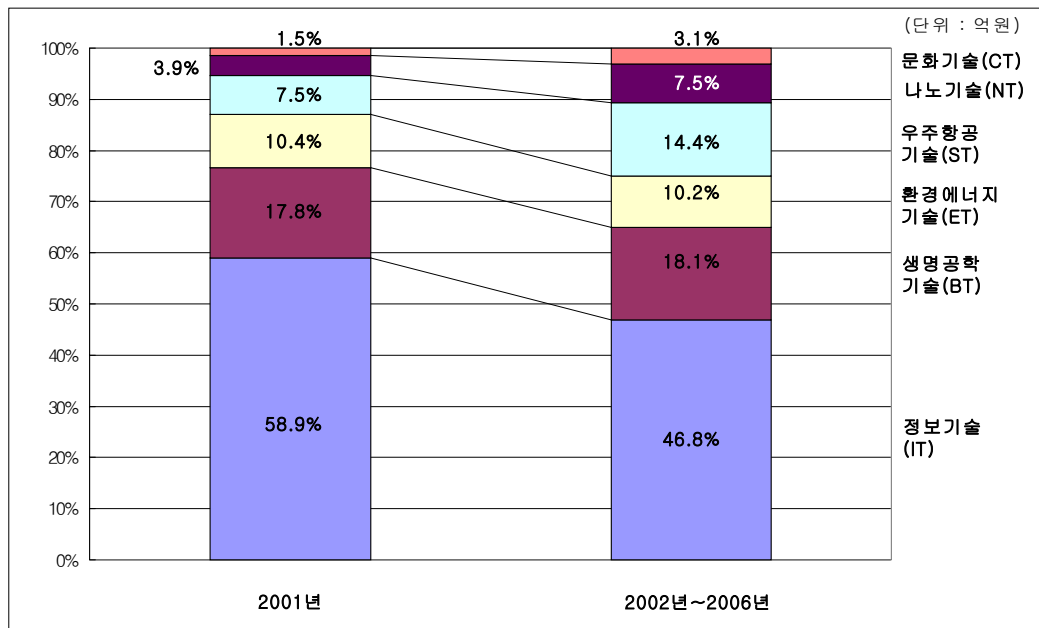
□ 기본방향

○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 차원에서 중점 투자 및 지원 확대

-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우주항공기술(S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미래유망 신기술분야가 투자 비중은 다음과 같음

<그림 II-3>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 투자 계획



주1) 2001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시 투자 실적

2002년~2006년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투자 계획임

□ 중점투자방향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에 대한 전략적 중점 투자 및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 및 핵심 전략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기술분야간 투자 우선순위 설정
 - 정보기술(IT)의 경우 정부투자는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개발 분야에 집중하고, 개발연구는 민간의 투자 유도 및 역할 강화로 정부 투자방향 및 규모를 조절
 -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이며,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장 가능성이 높아 핵심원천기술, 기반기술, 인력양성 분야 등에 정부 투자 확대 필요

【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개발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IT, BT, NT, ET의 경우 기초연구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하며 ST, CT는 개발을 통한 핵심 기술확보에 주력

마. 경제사회목적별 투자방향

□ 기본방향

- 기초연구진흥을 통해 국가 기술혁신 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력기간산업 및 신산업의 핵심기술 창출 필요

□ 중점투자방향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반적 지식증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과학기술 기본계획』)
 -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분야 투자 확대
 - 창의적 연구자 육성 및 학제간 연구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신기술 및 기초과학 지원을 위한 대형공동연구시설 확충 및 활용 활성화

바. 정부·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

□ 기본방향

- 정부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과학기술 기본계획』)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개발 활동과의 연계, 연구성과의 확산 노력이 필요
 - 산·학·연 기술혁신주체의 역할 정립 및 이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선정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수요를 반영
 - 민간연구소와 연구영역 분담 등 출연연구소의 기능 재정립이 매우 시급
 - 출연연구소의 연구방향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형과제, 공공기술과제 및 산업계의 수요에 대비한 장기적 선행연구에 보다 집중

□ 중점투자방향

- 국가 총 연구개발비중 정부부담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현 수준보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투자 확대
-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렵고 정부·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분야 중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연구개발예산을 중점 배분(「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 정부는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의 보완적 차원에서 중장기 핵심전략기술과 원천·공공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
 -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지원
 - 장기적으로 정부부문에서 담당하기가 적절하지 않는 기술은 민간이 담당하고 공공부문의 투자와 함께 이에 대응한 민간 R&D투자의 내실화 유도

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기본방향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투자의 효율성 제고(『과학기술기본계획』)
 -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 및 기술예측·수요조사 강화로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계와 성과 제고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평가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연구성과의 이전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 연구개발사업 구성체계의 합리화, 부처간 연구개발영역의 차별화 강화 및 효율적 연계·협력체제의 구축

□ 중점투자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및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등 투자 효율화 체계 강화
 -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의 활성화 및 공동 활용 연계의 강화
 -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의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연구관리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양성

3. 심의위원회별 투자방향

가. 연구기반조성

□ 과학기술 인력부문 투자방향

- 이공계 우수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강화
 - 이공계 대학생(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센티브제고 등 이공계 교육지원의 내실화
 -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초중고 과학 프로그램 개발
 -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확대 및 사회적 대우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과학기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제도 구축과 산업현장 핵심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강화
 - 기술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유망기술 분야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수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 확충
 -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Post-doc 지원 강화
 -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과학기술자의 활용 강화
 -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술직 확보(Technician 등)

□ 공동연구 장비시설의 확충 및 활용 활성화 부문의 투자방향

- 신기술 및 기초과학 지원을 위한 대형 공동연구 장비시설의 확충 및 활용 활성화
 - 나노 Fab., 신뢰성 연구센터 등 신기술분야의 공동 활용장비 확충 및 활용 제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부문의 투자방향

- 중소기업 기술능력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기술혁신인프라 확충
 - 지역 내 연구·시험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추진
 -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탁월성 연구거점(COE) 지원 부문 투자방향

- 신기술의 원천지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탁월성 연구거점(COE: Center of Excellence)의 지원 등 다양한 연구자원 확보

나.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 신기술의 기초역량 제고 부문 투자방향

- 신기술의 기초지식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초과학 및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
 - 창의적 우수연구자의 기초·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지속 지원

□ 공공·복지기술 부문 투자방향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복지기술 투자 확대
 - 환경보전, 국민의 건강·보건 등 국민의 복지증진

□ 국가안위 및 위상제고 부문 투자방향

- 국가 안위 및 위상제고에 기여하는 기술개발 투자 확대
 -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우주기술, 국방기술 등의 민·군 겸용 기술개발체계 강화
 - 에너지절약,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 표준화 기술 향상의 지원 부문 투자방향

- 세계적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강화
 - 국제 표준화 활동 적극 지원
 - 미래유망기술 부문의 표준화 기술 향상 지원
 -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다.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 미래유망 신기술 부문 투자방향

-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 IT, BT, NT, ST, ET, CT 등 미래유망신기술중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집중 투자
 - 성장기여도가 큰 정보통신기술(IT)은 민간이 단독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핵심 부품, 통신시스템 등 원천기술 중심으로 지원

- 미래유망신기술인 나노(NT), 생명공학기술(BT)은 인력양성 등 기술기반 구축과 함께, 관련산업 육성의 시드(Seeds) 제공
- 세계시장점유율 제고를 지향한 세계 일류상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
 - 세계 최고급 제품 개발 및 세계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

□ 주력기간산업의 신기술 접목과 핵심기술개발 부문 투자방향

- 주력 기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 집중 투자
 -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TFT-LCD 등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기초기술개발
 - 전통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신기술 접목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의 지속적 추진 및 신기술 벤처기업의 적극적 육성 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라. 연구기관지원사업

- 신기술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확충과 기관 특성에 따른 연구기능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 지원
 - 기관평가와 연계한 예산의 차등 지원 강화
 - 안정적 연구를 위한 기관 고유사업비 및 인건비 예산의 지원
 - 신규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노후 연구장비·시설의 개체 지원
-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술축적이 필요한 공공 연구개발기능에 대한 안정적 예산 지원

Ⅲ.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결과

1. 심의결과 종합

가. 심의결과 종합

□ 계속사업

○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대상 153개 계속사업 중 45개(29.4%) 사업에 대하여 “투자확대” 심의의견이 제시되었으며, 45개(29.4%) 사업에 대해 “투자 축소”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를 요구액 기준으로 보면, “투자확대” 심의의견 사업이 2조 5,172억원 (42.8%) 규모이며, “투자축소”의견 사업은 8,936억원(15.2%) 규모임.

< 표 Ⅲ-1 > 계속사업 우선순위별 분포

(단위 : 억원)

우선순위	사업수	2003년 요 구	예시
투자확대	45 (29.4%)	25,172 (42.8%)	·목적기초연구사업(과기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자부) ·지방대육성과제지원(교육부) ·임업연구원(산림청)
계속지원	63 (41.2%)	24,727 (42.0%)	·신약개발지원(복지부) ·민군겸용기술사업(국방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산자부) ·한국기계연구원(국무조정실)
투자축소	45 (29.4%)	8,936 (15.2%)	·지능형교통시스템(건교부)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산자부) ·산학협력촉진지원(교육부) ·원자력병원(과기부)
합 계	153	58,835	

□ 신규사업

○ 2003년도 신규사업 20개 중 6개(30.0%) 사업에 대하여 “적극지원필요” 심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재검토요망”의 경우도 6개(30.0%) 사업이 제시됨.

- 이를 요구액 기준으로 보면, “적극지원필요” 심의의견 사업이 780억원 (36.6%)규모이며, “재검토요망”의견 사업은 526억원(24.7%) 규모임.

< 표 III-2 > 신규사업 우선순위별 분포

(단위 : 억원)

우선순위	사업수	2003년 요 구	예시
적극 지원필요	6 (30.0%)	780 (36.6%)	·미래보건의료전략기술개발(복지부) ·기업협동형전략기술개발지원(중기청)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산자부)
지원필요	8 (40.0%)	826 (38.7%)	·기상관측위성개발(기상청) ·조달시장연계신제품연구개발(중기청) ·선도기초과학연구실(과기부)
재검토요망	6 (30.0%)	526 (24.7%)	·신소재건강기능식품연구개발사업 (식의약청) ·중소기업기술연구회지원(중기청) ·국가전략분야고급R&D인력양성지원 (교육부)
총합계	20	2,132	

나. 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심의위원회

○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소관 사업 53개(계속사업 45개, 신규사업 8개)에 대하여 우선순위 설정

- 45개 계속사업 중 투자확대 13개 사업(28.9%), 계속지원 19개 사업(42.2%), 투자축소 13개 사업(28.9%)으로 심의됨.
- 8개 신규사업 중 적극지원필요 2개 사업(25.0%), 지원필요 4개 사업(50.0%), 재검토요망 2개 사업(25.0%)으로 심의됨.

< 표 III-3 >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우선순위 분포

(단위 : 억원)

구 분	우선순위	사업수	2003년 요 구
계속사업	투자확대	13 (28.9%)	8,990 (49.5%)
	계속지원	19 (42.2%)	7,512 (41.4%)
	투자축소	13 (28.9%)	1,642 (9.1%)
	소 계	45 (100.0%)	18,144 (100.0%)
신규사업	적극지원필요	2 (25.0%)	320 (30.2%)
	지원필요	4 (50.0%)	556 (52.4%)
	재검토요망	2 (25.0%)	184 (17.4%)
	소 계	8 (100.0%)	1,060 (100.0%)
합 계		53	19,204

□ 산업기술연구사업 심의위원회

- 산업기술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소관 사업 32개(계속사업 29개, 신규사업 3개)에 대하여 우선순위 설정
 - 29개 계속사업 중 투자확대 8개 사업(27.6%), 계속지원 13개 사업(44.8%), 투자축소 8개 사업(27.6%)으로 심의됨.
 - 3개 신규사업 중 적극지원필요 1개 사업(33.3%), 지원필요 1개 사업(33.3%), 재검토요망 1개 사업(33.3%)으로 심의됨.

< 표 III-4 > 산업기술연구사업 우선순위 분포

(단위 : 억원)

구 분	우선순위	사업수	2003년 요 구
계속사업	투자확대	8 (27.6%)	10,169 (56.2%)
	계속지원	13 (44.8%)	6,737 (37.2%)
	투자축소	8 (27.6%)	1,184 (6.5%)
	소 계	29 (100.0%)	18,090 (100.0%)
신규사업	적극지원필요	1 (33.3%)	110 (43.8%)
	지원필요	1 (33.3%)	90 (35.9%)
	재검토요망	1 (33.3%)	51 (20.3%)
	소 계	3 (100.0%)	251 (100.0%)
합 계		32	18,341

□ 연구기반조성사업 심의위원회

- 연구기반조성사업 심의위원회 소관 사업 43개 사업(계속사업 34개, 신규사업 9개)에 대하여 우선순위 설정
 - 34개 계속사업 중 투자확대 10개 사업(29.4%), 계속지원 14개 사업(41.2%), 투자축소 10개 사업(29.4%)으로 심의됨.
 - 9개 신규사업 중 적극지원필요 3개 사업(33.3%), 지원필요 3개 사업(33.3%), 재검토요망 3개 사업(33.3%)으로 심의됨.

< 표 III-5 > 연구기반조성사업 우선순위 분포

(단위 : 억원)

구 분	우선순위	사업수	2003년 요 구
계속사업	투자확대	10 (29.4%)	3,177 (21.2%)
	계속지원	14 (41.2%)	7,856 (52.3%)
	투자축소	10 (29.4%)	3,985 (26.5%)
	소 계	34 (100.0%)	15,018 (100.0%)
신규사업	적극지원필요	3 (33.3%)	350 (42.7%)
	지원필요	3 (33.3%)	180 (21.9%)
	재검토요망	3 (33.3%)	291 (35.4%)
	소 계	9 (100.0%)	821 (100.0%)
합 계		43	15,839

□ 연구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 연구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소관 45개 기관에 대하여 우선순위 설정

- 투자확대 14개 사업(31.1%), 계속지원 17개 사업 (37.8%), 투자축소 14개 사업(31.1%)으로 심의됨.

< 표 III-6 > 연구기관지원사업 우선순위 분포

(단위 : 억원)

우선순위	사업수	2003년 요 구
투자확대	14 (31.1%)	2,836 (37.4%)
계속지원	17 (37.8%)	2,622 (34.6%)
투자축소	14 (31.1%)	2,125 (28.0%)
소 계	45 (100.0%)	7,583 (100.0%)

다. 부처별 심의결과

- 2003년도 사전조정대상 예산요구액 6조 967억원의 26.6%를 차지하고 있는 과학기술부(1조 6,208억원)의 사전조정 대상 34개 사업(계속 29개, 신규 5개)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29개 계속사업 중 21세기프론티어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투자확대 심의의견이 제시된 반면, 연구성과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투자축소 의견이 제시됨.
 - 5개 신규사업 중 적극지원필요 1개 사업(국가핵심연구센터육성), 지원필요 3개 사업, 재검토요망 1개 사업으로 심의결과가 도출됨.
- 산업자원부(1조 5,374억원)의 사전조정 대상 33개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29개 계속사업 중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투자확대 심의의견이 제시된 반면,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투자축소 의견이 제시됨.
 - 4개 신규사업 중 적극지원필요 2개 사업(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 국제 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지원필요 2개 사업으로 심의결과가 도출됨.
- 정보통신부(6,267억원)의 사전조정 대상 7개 사업 중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지원,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투자축소 심의결과가 도출됨.
- 교육인적자원부(5,011억원)의 사전조정 대상 11개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10개 계속사업 중 투자확대 2개 사업(기초학문지원 등), 계속지원 5개 사업, 투자축소 3개 사업으로 나타남.
 - 신규사업인 국가전략분야R&D인력양성사업은 재검토요망 심의의견이 제시됨.
- 국무조정실(3,594억원)의 경우는 사전조정 대상 20개 기관의 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비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에 대하여 투자확대 심의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6개 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에 대하여 투자축소 의견이 제시됨.

< 표 III-7 > 부처별 계속사업 우선순위 분포

부 처	구 분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	합 계
건설교통부	사업수 비중(%)	2 33.3	2 33.3	2 33.3	6 100.0
과학기술부	사업수 비중(%)	10 34.5	13 44.8	6 20.7	29 100.0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수 비중(%)	2 20.0	5 50.0	3 30.0	10 100.0
국무조정실	사업수 비중(%)	8 40.0	6 30.0	6 30.0	20 100.0
국 방 부	사업수 비중(%)	- -	2 100.0	- -	2 100.0
기 상 청	사업수 비중(%)	2 66.7	- -	1 33.3	3 100.0
농 림 부	사업수 비중(%)	2 50.0	1 25.0	1 25.0	4 100.0
농촌진흥청	사업수 비중(%)	3 23.1	3 23.1	7 53.8	13 100.0
문화관광부	사업수 비중(%)	- -	- -	1 100.0	1 100.0
보건복지부	사업수 비중(%)	3 33.3	3 33.3	3 33.3	9 100.0
산 림 청	사업수 비중(%)	1 33.3	1 33.3	1 33.3	3 100.0
산업자원부	사업수 비중(%)	8 27.6	14 48.3	7 24.1	29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수 비중(%)	- -	1 100.0	- -	1 100.0
정보통신부	사업수 비중(%)	- -	4 57.1	3 42.9	7 100.0
중소기업청	사업수 비중(%)	1 20.0	1 20.0	3 60.0	5 100.0
철 도 청	사업수 비중(%)	- -	1 100.0	- -	1 100.0
해양수산부	사업수 비중(%)	1 16.7	4 66.7	1 16.7	6 100.0
행정자치부	사업수 비중(%)	- -	1 100.0	- -	1 100.0
환 경 부	사업수 비중(%)	2 66.7	1 33.3	- -	3 100.0
합 계	사업수 비중(%)	45 29.4	63 41.2	45 29.4	153 100.0

< 표 III-8 > 부처별 신규사업 우선순위 분포

부처	구 분	적극지원필요	지원필요	재검토요망	합 계
건설교통부	사업수	1	-	-	1
	비중(%)	100.0	-	-	100.0
과학기술부	사업수	1	3	1	5
	비중(%)	20.0	60.0	20.0	100.0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수	-	-	1	1
	비중(%)	-	-	100.0	100.0
기 상 청	사업수	-	1	1	2
	비중(%)	-	50.0	50.0	100.0
보건복지부	사업수	1	1	1	3
	비중(%)	33.3	33.3	33.3	100.0
산업자원부	사업수	2	2	-	4
	비중(%)	50.0	50.0	-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수	-	-	1	1
	비중(%)	-	-	100.0	100.0
중소기업청	사업수	1	1	1	3
	비중(%)	33.3	33.3	33.3	100.0
합계	사업수	6	8	6	20
	비중(%)	30.0	40.0	30.0	100.0

2. 원천·공공·복지연구사업 심의위원회

가.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기준

□ 심의 기본방향

- 사전조정 심의지침에서 제시한 2003년도 중점투자방향에 의거하여 기초연구와 미래유망 신기술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였음.
- 신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지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연구, 대학연구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미래원천 기술개발을 중시함.
- 국민건강, 환경보건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원자력, 항공, 에너지, 해양분야 등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 교통건설 등 사회간접비용 절감을 위한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중시함.

□ 심의기준

- 연구개발사업의 내용이 국가의 원천·공공·복지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연구 추진체계가 완벽하여 연구성과가 확실하게 예견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심의함.
- 연구사업의 목적은 부합되나 연구기획이 부실하여 연구의 목표달성율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적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건의함.
- 연구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통합운영이 연구성과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명기하고 관련사업과 통합적인 예산심의를 건의함. 또한 부처내·부처간의 유사사업들에 대해서도 통합/연계추진을 건의하고 이를 심의에 반영함.
- 연구의 내용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연구의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사업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선택과 집종의 근거로 하였음. 특히 원천, 복지기술연구사업에는 국가의 기초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인 미래원천기술개발을 중시하였음.
- 소규모연구사업, 틈새연구사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사업추진 필요성, 시급성,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였음.
- 부처고유사업의 성격이 강한 연구개발사업은 부처고유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음.

-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와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검토사항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사결과의 타당성을 논의한 뒤에 그 반영정도를 검토하였음.
- 종합적인 연구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요구한 내용의 예산과 2002년도 예산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심의조정 결과를 도출하였음.
- 사전조정 심의위원들도 2002년도 조사·분석·평가사업의 계속사업별 설명회에 같이 참여하여 2002년도의 사업진행 내용도 심의 시 고려하고, 2002년도 사전조정 결과, 예산요구서, 사업설명회, 보충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심의가 되게 하였음.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기획보고서의 충실성을 중시하여 검토하고 계속사업과의 연계성을 깊이 고려하여 심의하였음. 신규사업에서 적극지원필요의 심의의견을 받은 경우에도 시간의 제약 상 연구기획이 부실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고 심의에 반영하였음.

나. 심의결과 종합

□ 계속사업

사업수 \ 우선순위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	계
사업수	13	19	13	45
비율(%)	28.9	42.2	28.9	100

□ 신규사업

사업수 \ 우선순위	적극지원필요	지원필요	재검토 요망	계
사업수	2	4	2	8
비율(%)	25	50	25	100

□ 종합의견

-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의 신청예산규모는 1,920,374백만원으로 2002년 예산 대비 63,4%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계속사업 45개, 신규사업 8개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의 증액을 요청한 결과임.

○ 이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 원천기술 499,361백만원(30,7%증가)
- 공공부문 920,886백만원(61,5%증가)
- 복지기술 500,127(124,4%증가)으로 나타남

○ 이는 2002년 전년대비 예산규모증가율 8.3%에 비해 약 7.6배로 높은 수치이나 미래유망신기술, 기초연구 및 공공복지기술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2002-2006년 국가과학기술투자계획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투자규모 확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예산요구라 볼 수 있음.

○ 상대평가 방침에 따라 투자확대 : 계속지원 : 투자축소 = 3 : 4 : 3 의 비율로 배분되어 투자축소로 평가받은 사업이 13개 사업이 되었으나 이 사업 모두가 투자축소 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투자축소사업의 수를 줄이거나 투자축소의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배려가 필요함. 특히 원천분야 연구사업의 경우, 분야의 특성상 계속사업이 투자축소의 심의의견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고려가 있기를 제안함.

○ 연구를 위한 연구, 경쟁력 확보와 관계가 없는 2등 기술개발 등과 같은 분야는 과감히 제외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 위주로 투자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제한된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감안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민간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됨.

○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기술발전방향이나 국가중점투자방향과 일치되는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제경쟁력확보 여부, 연구비 규모, 부문별 연구집단의 능력에 적합한 특화전략이 결여되어 있음.

○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질병관리, 국민건강증진, 안전한 식품 및 약품관리 등의 중요한 고유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함.

○ 제품화 단계에 근접한 중급기술인 의료기술 등은 기업이 시장성이나 경제성에 입각하여 투자를 주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투입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신규사업심의 내용의 특기사항

- 건설교통부의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방만한 사업계획, 일부세부사업의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부처간 사전협의 미흡(산업자원부, 경찰청 등)등 사전

기획이 철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절감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사업을 재구성하고 신청예산을 조정한 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함.

- 신규사업중 과학기술부의 ‘방사선기술(RT)개발사업’은 최종평가에서 제한적인 선택으로 ‘적극지원 필요’평가를 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이 분야의 투자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특별한 고려가 있기를 건의함.

□ 사업별 우선순위

○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부 처	사 업 명	2002년 예 산	2003년 요 구	우 선 순 위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혁신	7,000	25,000	투자확대
	경량전철기술개발	9,500	10,000	계속지원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5,000	9,000	계속지원
	도시철도표준화연구	4,000	7,400	투자축소
	지능형교통시스템	22,739	48,195	투자축소
과학기술부	목적기초연구사업(기초과학연구지원)	98,383	165,385	투자확대
	우주기술개발사업	104,970	182,500	계속지원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기금포함)	153,200	165,421	투자확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운영사업 (기초과학연구지원)	20,180	23,629	투자축소
	창의적연구진흥사업(우수연구및연구리더육성)	32,200	44,100	투자확대
교육인적 자 원 부	공동연구과제지원(학술연구조성)	43,700	53,200	계속지원
	기초학문지원(학술연구조성)	132,300	155,300	투자확대
	대학원의연구력강화(학술연구조성)	11,000	11,000	투자축소
	우수연구자지원(학술연구조성)	33,000	34,500	계속지원
	우수학술단체지원(학술연구조성)	6,000	6,000	투자축소
국 방 부	기초연구/특화센터	5,307	6,247	계속지원
기 상 청	기상지진기술개발	3,830	10,500	투자확대
	기후변화감시및장기예측시스템구축	1,020	1,084	투자축소
농 립 부	농촌생산기반연구	2,338	2,560	투자축소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	2,801	3,132	계속지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공동연구	23,024	33,413	투자확대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12,342	35,381	투자확대
	병해충잡초발생감시체계구축	1,182	1,500	투자축소
보건복지부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보건산업진흥)	10,600	30,000	계속지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보건산업진흥)	39,000	51,500	투자확대
	신약개발지원(보건산업진흥)	16,000	40,000	계속지원
	유전체실용화사업	4,900	8,900	투자확대
	질병관리연구	3,177	9,500	투자축소
	한방치료기술개발	2,500	25,000	투자축소
	휴먼의료공학기술개발(보건산업진흥)	14,000	20,800	투자축소

부 처	사 업 명	2002년 예 산	2003년 요 구	우 선 순 위
산 림 청	산림유전자원연구	1,009	1,991	계속지원
산업자원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	24,647	45,421	계속지원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	300	5,000	투자축소
	에너지이용합리화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	29,802	51,260	계속지원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기금)	78,700	116,100	계속지원
	항공우주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26,000	27,000	투자확대
식품의약품 안 전 청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	20,000	73,450	계속지원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	23,600	28,300	계속지원
	표준화사업(기금)	33,000	29,150	계속지원
철 도 청	철도기술연구개발	6,000	21,060	계속지원
해양수산부	첨단항만기술개발	3,208	5,650	계속지원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27,250	57,112	투자확대
	해상안전연구개발	750	2,550	투자축소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5,803	10,195	계속지원
환 경 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70,000	120,000	투자확대

○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부 처	사 업 명	2002년 예 산	2003년 요 구	우 선 순 위
건설교통부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	-	22,000	적극 지원필요
과학기술부	방사선기술(RT)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	-	10,000	지원필요
기 상 청	기상관측 위성개발사업	-	2,588	지원필요
	차세대 산업응용기상기술개발	-	400	재검토요망
보건복지부	미래보건 의료전략기술개발(보건산업진흥)	-	10,000	적극 지원필요
	나노보건기술개발(보건산업진흥)	-	15,000	지원필요
산업자원부	헬기기술자립화사업	-	28,000	지원필요
식품의약품 안 정 청	신소재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사업	-	18,000	재검토요망

다. 사업별 심의 결과

□ 건설교통기술혁신(건설교통부 : 투자확대)

- 본 사업은 ‘건설교통의 기초기술 기반확립’, ‘SOC 기술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의 효율적 지원’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교통시설, 신공간·도시개발, 건설 관리 부문에 9개의 중점 추진 분야를 추진하고 있음.
- 재기획으로 중점추진분야별로 과제별 유기성과 연관성이 강화되었으며 추진 체계와 추진방법도 매우 효율적이라 판단됨.
- 사업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민간의 참여도 확대하길 바람.
- 특기사항
 - 정부지도로 수행해야 하는 공공성과 SOC 기술 개발로 기관시설에 투자하는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음.
 - 공공의 안정과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

□ 경량전철기술개발(건설교통부 : 계속지원)

- 본 사업은 한국형 최적경량시스템을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급하기 위한 관련기반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세부사업의 구성은 적절하며, 사업추진체계도 합리적이라 판단됨.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경량전철사업의 일정에 맞추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본 사업의 심의 근거임.
- 본 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소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연구성과를 활용할 지방자치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의 설정이 바람직함.
- 특기사항
 - 수입대체 효과가 큰 경제적 측면, 교통시설의 안전성을 재고하는 공공복지 측면을 주안점으로 두고 심의

□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건설교통부 : 계속지원)

- 한국형 고속철도기술의 개발은 21세기 국가 교통망 구축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 G7사업의 연계사업이며, G7사업 수행으로 축적된 연구역량과 know-how를 활용하는 본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이 됨.
- 2003년도 주요 사업 내용은 ‘신뢰성 평가 및 안전 체계 구축’과 ‘시스템 안정화’이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시제작된 차량시스템의 시운전을 통한 차량/신호/선로 구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기사항
 - 국가교통망 구축의 핵심적인 요소 기술개발임.
 - 향후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의 국산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개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도시철도표준화연구(건설교통부 : 투자축소)

- 본 사업은 도시철도의 차량, 신호통신, 전력 및 선로 등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유지체계의 표준화/정보화를 통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성 및 운영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표준화 대상 등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사업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함.
- 특기사항
 - 국가 기간시설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공공성과 국산화기술개발로 건설 및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경제성을 중점 검토

□ 지능형교통시스템(건설교통부 : 투자축소)

- 본 사업은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큼.

- 주관기관이 확정되었으므로 단계별, 년도별 개발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에 적합한 개발내용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함. 특히 1 단계에는 첨단시스템개발 보다는 국민의 교통서비스 개선에 주목표를 설정하여 연구수행하기를 권고함.
- '03년도 9과제는 '02년도 계속과제 4과제, '03년도 신규과제 5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성과에 비해 과다하게 신규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자유 공모과제(20억) 및 기타과제(26억)는 현 단계에서 불필요하다고 봄. '03년도에는 '02년도 계속과제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체제정비를 확고히 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표준화연구는 건교부, 정보통신부, 경찰청이 부처간 협의하여 표준규격을 통일하기를 바람.
- 특기사항
 - 국가적 시급도, 사회적 공공성 및 파급효과, 경제성, 사업수행결과 및 수행 능력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심의
 - 현재의 사업성과에 비해 과다하게 신규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
 - 지자체국고지원, 민간대행사업 등 시설사업이 예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목적기초연구사업(과학기술부 : 투자확대)

- 국가 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투자확대가 바람직함.
- 투자확대와 더불어 신진 과학자의 연구진입장벽을 하향 조정하여 연구실적 위주의 평가보다는 연구계획서 평가 비중을 높여 창의적 연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제당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다양화하여 연구성과의 양적인 확대와 심층 연구를 통한 질 높은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 개발이 요망됨.
- 선의의 연구실패자가 성공적인 연구자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
- 특기사항
 - 본 사업은 원천기술분야의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이 과학기술 기반구축이고 사업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심의의 주안점을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에 두었음.

□ 우주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우주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중점투자방향 내용 중 국가안위 및 위상제고에 기여하는 우주기술(ST) 개발과제로 전략적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연구개발투자는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03년도 요구예산은 2002년 예산보다 775억이 증가한 1,825억으로 74%증액되었음. 주요 증액과제는 우주발사체 과제로 640억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제출자료 미흡으로 증액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음. 따라서 세부항목별 예산검토가 요구됨.
- 특기사항
 - 본 사업은 국가 안위 및 위상제고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연구비 투자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세부항목별 예산검토가 필요함.

□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기금포함)(과학기술부 : 투자확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97~’06)”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적 사업으로서 원자로, 핵연료, 폐기물처리안전 등 전 과정이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국가핵심 사업으로 연구개발 성공시 향후 국제경쟁력 및 국민복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전문가 및 각계 정책입안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분석·기획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성공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타 분야에의 이용 확대를 위해 사전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원자력 분야의 비 발전 분야인 방사선 이용 기술을 포함하여 원자력 기술의 학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 특기사항
 - 원자력 분야의 대규모의 투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및 정부출연금의 지원확대가 필요함.

□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운영사업(과학기술부 : 투자축소)

- 본 사업은 장치설계가 끝나고 장치제작 단계에 들어간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진도에 약간의 차질이 있음.

○ 본 사업은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꿈으로 고려되는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세계 선도 그룹에 참여하자는 야심찬 계획으로 그 전략성이 뚜렷함.

○ 반면 목표 성취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약하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서 핵융합연구장치제작/운영방안과 아울러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user 그룹 양성에 중점을 둘 것이 요망됨.

○ 특기사항

- 심의평가의 주안점은 향후 사업추진 후 성과 활용방안과 기대되는 파급 효과에 두었음.

□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학기술부 : 투자확대)

○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선도연구자를 bottom -up 방식으로 선정하여 창의적 연구과제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며,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 충실한 사업방식이 타사업과 구별되는 우수한 연구지원사업임.

○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성과가 나타난 점이 인정됨.

○ “관리위주” 보다는 ‘지원위주’의 사업추진을 건의한 과년도에 평가에 대하여 여러 여건상 획기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되나 사업의 특성상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개선이 요망됨.

○ 과학기술기반구축과 아울러 선도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때, 이 사업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계속 추진되어야한다고 봄.

○ 특기사항

- 본 사업은 원천기술분야의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이 과학기술기반구축과 창의적 선도연구 지원사업이며 사업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평가의 주안점을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지원과제의 질적관리 체계에 두었음.

□ 공동연구과제지원(교육인적자원부 : 계속지원)

○ 목적 범위 내에서 공동연구 형태와 대학부설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사업 내용 등이 적절함.

○ 협동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를 권장하고 있으나, 인문 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의 다학문간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순수기초학문 지원을 통하여 연구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특기사항

- 사업의 목표 및 추진달성도는 매우 높으나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미흡함.
- 또한 정량적 지원 성과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지원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동연구형태의 과제와 우수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주요 평가 주안점임.

□ 기초학문지원(교육인적자원부 : 투자확대)

○ 기초과학 지원을 위한 동 사업의 구성내용이 합리적이고 적절하여 목표 추진과 달성도가 높음.

○ 연구결과물의 SCI급 학술지 게재 의무화 등 연구결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신규과제 지원 비율과 1인당 지원액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기초과학의 분야별 성격에 맞게 연구자의 신청자격이나 연구업적 조건을 차등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예산의 증액지원이 필요함.

○ 특기사항

- 본 사업은 기초과학지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인문·사회과학의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부합되는지가 주요 심의 대상임.

□ 대학원의 연구력강화(교육인적자원부 : 투자축소)

○ 본 사업 수립시에 제시된 기본목표에 부합하는지가 주 평가대상으로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의 파악이 필요할 것임.

○ 정부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70% 이상이 대학원생의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고급인력양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함.

○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 지원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됨.

- 본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사업 재검토 및 재구성이 요망됨.

□ 우수연구자지원(교육인적자원부 : 계속지원)

- 본 사업은 과학기술관련 연구자의 경력별(예, 박사후과정, 신진교수 및 선도 연구자 등)지원하는 과제로서 연구자의 연구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과제수를 다량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연구비 내에서 우수한 과제를 선발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를 육성하는 기초연구사업이 되도록 유도
- 특기사항
 - 과학기술 학문 전 분야에 걸쳐 교육과 연계된 연구 지원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우수학술단체지원(교육인적자원부 : 투자축소)

- 교수 업적평가/연구결과에 대한 발표 기회 제공과 학술 정보의 공유 등 학술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신생 전문분야 학회 급증에 따른 학회 운영 지원강화 필요성 및 국내 학회지의 국제 수준화 지원 확대의 필요 등을 감안할 때 계속지원이 필요하지만,
- 유사 학술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학술 단체의 통·폐합에 대한 방안 마련과 아울러 학회지/학술단체의 질 향상 측면에서 엄정한 선정을 통해 우수 학술 단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요구되며 아울러, 예산 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국내 학회지를 SCI에 등재시키는 목표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학술 활동(학술대회/학회지 발행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음.
- 특기사항
 -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학술단체의 중요성, 학술단체의 우수성 신장을 위해 현행사업의 기여도, 현재 수행중인 2과제(학술지 발행지원, 학술대회 개최 지원)의 운영 및 성과 등에 주안을 두고 심의

□ 기초연구/특화센터(국방부 : 계속지원)

- 미래 중점 추진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및 부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국방 핵심기반 기술 확보와 국방과학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임.

○ 개별기초연구와 특화연구센터로 구분하여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사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계속 지원 필요

○ 특기사항

- 국방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의 국방첨단기술 관련 기초 연구와 연구인력의 양성·활용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기상지진기술개발(기상청 : 투자확대)

○ 최근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피해규모가 급증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기상과 지진의 피해저감기술 및 이를 위한 기상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함.

○ 특히, 가뭄재해 저감을 위한 인공증우(안개소산기술 포함)기술, 황사의 종합 감시 및 예측기술, 국가기후변화 대응기술, 집중호우 예측기술,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3차원 입체관측시스템개발 등에 중점 투자확대가 요망됨.

○ 기상청 전체예산 중에서 연구과제비로 자체 할당하여 신규투자를 계획함으로 인한 개발예산의 제한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 마련을 건의함.

○ 특기사항

- 기상청의 계속사업인 “기후변화 감시 및 장기에측시스템 구축”과 신규사업인 “차세대 산업응용기상기술개발”의 최종목표가 본 사업과 일치하고 사업추진 방법이 유사하여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토록 기상청 자체의 사업내용 조정 필요성이 있음.

□ 기후변화감시 및 장기에측시스템구축(기상청 : 투자축소)

○ 한반도 오존 및 배경대기를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이상기후 대응책 수립을 위한 엘니뇨/라니냐 감시 및 장기에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산업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반 사업으로서 적절하며,

-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 보아 최종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장비구입과 연간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기상지진기술개발 과제에 단위과제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 기후변화 감시장비 구입비용, 워크숍 비용, 기준지도 비용, 장비점검비용 등은 기상청 경상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비를 투자 축소시킬 것

○ 특기사항

- 기상분야의 기반기술개발이 사업목표인 기상청의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기할 필요가 있음.

□ 농촌생산기반연구(농림부 : 투자축소)

○ 농촌기술개발과 농업용수수질조사 등 사업 내용은 부처의 임무에 부합되나 기술개발 중장기계획이 없는 등 사업의 전략성이 부족함.

○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은 단순 조사사업이므로 부처의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본 사업에서는 조사 결과의 분석 및 대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2004~2014의 10개년 사업은 단순한 기간연장이 아닌 현 사업의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내·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한 근본적인 기획이 요구됨.

○ 특기사항

- 농업용수 수질조사 사업은 연구개발이 아닌 단순조사 사업임.
-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이 없는 등 사업의 전략성이 부족함.

□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농림부 : 계속지원)

○ 계속 증가되는 가축전염병과 대량으로 유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연구는 시대적 필요성에 비추어 계속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확보된 연구인력과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사업목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 특기사항

- 국가적 중요성, 국민 건강에 미치는 효과, 파급 효과측면을 고려하여 심의 하였음.

□ 농업기술공동연구(농촌진흥청 : 투자확대)

○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 계획의 목표달성은 물론 국내외 환경변화에 등에 따른 중장기 사업목적 및 사업분야를 적절히 조정,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어 세부사업 구성 및 운영이 매우 적절함.

○ 사업기본계획수립, 연구과제발굴, 진도관리, 중간 및 연구결과 평가, 연구 결과활용 등에 있어서 산학연공동연구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체계가 매우 바람직함.

○ 또한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자체 수행과 외부공모를 통한 출연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진행되고 있으며, 연도별 기술개발실적과 연구수행능력측면의 실현 가능성으로 보아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농진청 외부의 우수연구두뇌를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2003년도 농업특정연구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투자하고, 국가정책지원 연구사업을 신규투자 할 필요가 있음.

○ 2002년 예산 230.24억원에서 2003년 334.13억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320억원 정도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특기사항

- 사업 심의시 국가적 시급성, 경제적 파급 효과,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순서를 고려하여 심의하였음.
- 대형공동연구사업, 농업특정연구사업 과제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해 과제당 연구비의 현실화가 필요함.

□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농촌진흥청 : 투자확대)

○ 생명공학기술은 2010년경부터 정보기술(IT)에 이어 신산업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로 연구 후발국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 초기에 적극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평가 등 관리에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체계가 잘 구성되었다고 판단됨.

○ 2001년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시일에 많은 결과가 도출된 점은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2003년도 예산은 우리나라 농업생명공학의 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요청한 353.81억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기사항

- 국가적 시급성, 파급효과, 인력 양성, 인프라구축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심의
- 사업의 최종 목표인 농업생명공학 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연구사업 규모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최종 수혜자인 농민을 생각하여 기초분야 기술개발(SCI 등재논문발표) 등에 연연하지 말고 고 부가가치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 등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병해충잡초발생감시체계구축(농촌진흥청 : 투자축소)

-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국제 교역량 등으로 외국으로부터 병해충 및 잡초 유입에 대한 방제 대책 수립은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 사업은 기술개발보다는 단순한 모니터링이 추가 되는 사업임을 감안 할 때 농업과학기술원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재 상습발생지를 대상으로 한 단순한 모니터링보다는 병해충의 유입, 전파 과정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 기획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기사항
 - 사업내용이 연구개발이 아닌 단순한 모니터링이 추가되는 사업임.
 - 기술개발 계획 없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기획이 필요함.

□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보건산업진흥)(보건복지부 : 계속지원)

- BT 전반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특히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이오보건”분야는 년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요망됨.
- 우리 나라의 바이오테크산업의 대부분이 보건의료기술과 관련이 있으며 유전체 연구 등의 기술발달로 질병극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공되고 암, 치매 등 난치병의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예측의학”시대를 열게됨. 바이오보건기술산업은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년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요망됨.
- 특기사항
 - 유전체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질환군별, 병원성미생물 등 특정 유전체 연구 센터의 연구지원으로 보건관련 유전체 기반 이용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보건산업진흥)(보건복지부 : 투자확대)

-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 수준이 저조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기술 수준 또한 매우 취약하므로 국가차원에서의 기반기술확보 및 보건의료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년차적으로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술 수준이 매우 취약하므로 국가차원에서의 기반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보건의료기술산업은 BT, NT, IT, ET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이 요구되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 특기사항

- 우리나라의 취약한 보건의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기반 기술확보 및 지방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연구 활성화에 대한 지원증가가 필요함.

□ 신약개발지원(보건산업진흥)(보건복지부 : 계속지원)

○ 국내 제약업계의 인프라가 미약하여 신개발 marketing 능력부재로 이 사업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사업수행을 할 것.

○ '95부터 2002년까지 857억원을 지원하여 국산신약개발(선플라, 밀리칸, 큐록, EGF)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므로 지속적인 투자지원이 중요함.

○ 특기사항

- 국가적 시급성, 경제적 파급 효과, 국민건강, 사업의 추진방법 및 사업성과에 우선 순위를 두어 평가하였음.

□ 유전체실용화사업(보건복지부 : 투자확대)

○ 유전체 사업은 앞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임.

○ 사업내용은 차세대선도산업으로 키우려는 바이오산업의 기본인프라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확대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됨.

○ 특기사항

- 국가적중요성, 경제효과, 인력양성 등을 중점사항으로 평가하였음.
-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열세에 있는 후발국으로서 예산확대지원을 통하여 대량분석시스템이나 바이오정보시스템구축으로 유전체발굴 기술격차나 유전자기능분석이나 활용분야에서 신속하게 열세를 만회할 수 있고 대책이 필요함.

□ 질병관리연구(보건복지부 : 투자축소)

- 본 사업에서 주요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관리연구,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성질환등의 만성비감염성 질환예방관리, 뇌질환 예방관리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됨.
- 한국인의 질병관리에 대한 DB 수립, 감시체계 운영 및 새로운 진단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의 계속지원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사업과의 사업성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투자축소로 평가됨.
-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전염병, 비감염성 질환 등 질병관리연구에 대한 연구 중심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고유사업으로서의 국가 인프라사업의 확충이 필요함.
- 사업의 내용중 기초연구 성격의 과제는 학문적 가치는 중요하나 이 사업의 성격상 축소하는 것이 좋겠음.
- 특기사항
 - 사업성과, 국민보건, 국가적 시급성, 인프라구축, 인력양성등의 면에 우선 순위를 두어 평가하였음.

□ 한방치료기술개발(보건복지부 : 투자축소)

- 뇌질환, 골관절질환, 내분비, 면역계질환, 암분야 등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의 실용화 연구개발을 목표로 함.
- 국민 건강 향상과 한방치료기술의 과학화 및 현대화를 위하여 다학제간의 상호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함.
- 2003년부터는 연구심화단계인 2단계 사업이 시작되어 임상연구시스템 구축 및 신물질 한약제제 연구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 및 추진 내용의 제시가 미약함.
- 사업확충에 대한 구체적 기획과 연구내용의 제시가 요구됨..
- 특기사항
 - 사업비의 증액에 대한 2003년 2단계 목표 및 연구내용의 제시가 불 충분함.

□ 휴먼의료공학기술개발(보건산업진흥)(보건복지부 : 투자축소)

- 신소재생체재료 분야도 타부서 (과기부의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 프론티어 사업, 산자부의 관련사업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하여 일부 삭감 이 필요함.

- 특히 실용화단계에 들어가 있는 보건의료생체계측기술분야는 마케팅지원이나 정부 구매시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세제면이나 구입우선권을 주면서 과감히 기업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면에서 유도하여야 하고,
- 경쟁력확보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기술개발은 철저히 신기술개발 중심으로 집중지원하면 예산 삭감이 가능함.
- 즉 정부 연구사업비는 미래에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에 기반을 두고 차세대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복합 전자의료기나 신기술제품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요구액에서 삭감이 가능함.
- 특기사항
 -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고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산림유전자원연구(산림청 : 계속지원)

- 장기적으로 국가의 중요자원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공공적·사회적 기여도가 큰 기술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채종원 사업 등 임업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특기사항
 - 본 사업은 국가의 복지기술 연구사업으로서의 중요성, 특히 공공적,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사업 목표대비 사업내용의 구성 및 추진체계 등을 고려하였음.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 계획” 및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한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에너지원 확보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구조로의 전환으로 국가 최종에너지의 절감, 기후변화협약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사업임.
- 상용화와 시장 성장잠재량이 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를 선택하여 중점 개발기술분야로 집중투자하고, 성능평가사업 및 실증연구사업을 통한 상용화

연구를 추진하는 등 개발과 보급 연계추진은 바람직하며, 2003년 총 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용화 관련 사업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함.

- 그러나 본사업의 2003년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상 제4단계(상용화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사업에 해당되므로, 계획기간내 상용화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신규과제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사업내용을 조정한 후 계속 지원함이 바람직함.

○ 특기사항

- 연구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비율,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중심으로 중점 심의

□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산업자원부 : 투자축소)

- 선진국들의 활발한 바이오에너지기술 개발 동향과 국가에너지개발계획을 고려할 때 본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사업의 연구개발단계가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초기단계로서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단계에서는 사업의 급격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사업내용중 생물화학제품 생산기술분야 경우는 에너지 절약효과는 기대되나 공공기술로서의 성격이 미흡하므로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투자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사업은 국내의 한정적인 바이오 부존자원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을 생각할 때 가능성이 제일 큰 분야에 대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재 기획이 필요함.

-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은 대체에너지의 한 가지 측면보다는 에너지전체 측면(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에서 종합적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접근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타당함.

- 그러나 이 경우에 연구분야가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소규모과제 형태로 난립될 수 있고, 연구결과와 현실성 결여 등이 예상됨.
-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중에서 바이오분야를 바이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인 추진을 권고함.

○ 특기사항

- 연구의 효율성, 인력자원활용가능성, 연구개발의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

- 본 과제는 산업자원부의 야심적인 연구개발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구기획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예산도 빈약하여 심사와 평가 시 지속적으로 대체 에너지개발과제와의 통합이 권유되고 있음. 연구 재기획을 통해서 확실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기를 권유함.

□ 에너지이용합리화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에너지자원이용합리화 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 최종에너지의 절감, 연료청정화 및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 대응, 산업원료소재의 국산화 기반확립 및 안정적 공급이라는 점에서 계속 지원해야 할 사업임.(3개 분야 공통)
- 본 사업은 에너지 절약기술개발사업,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및 자원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에너지자원이용합리화 기술개발사업으로 '02년부터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목표가 다르고 각 세부사업간 연계성이 적어 전년도 사전조정심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원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관련(에너지절약, 청정) 기술개발사업과는 분리, 별도 추진함이 바람직함.
- 세부사업 중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은 중장기 목표('06년 최종에너지 10%절감)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사업비증액이 바람직함.
- 세부사업중 자원부문의 기술개발은 기술의 성격상 장기간 운영을 통한 성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장치, 설비류와는 달리 파이롯트 플랜트단계까지의 연구결과로 실용화 가능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므로 시범보급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내용을 조정후 계속지원함이 바람직함.(자원 분야)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기금)(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본 사업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수행하던 준 정부적 공익기능사업을 정부가 이관 받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전력기술개발업무만을 조직화하여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으로 이름짓고 2001년 10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업임.
- 본 사업은 4개 대분야, 21개 중과제를 기본체계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선정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목적 지향적인 전략성과 기획성이 돋보이는 과제임.
- 2003년 예산은 1,161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7%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2002년은 연구기획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이 연구기획안에 의해서 요구된 첫년도 예산임.

○ 전력산업기술의 중요성과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요구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를 건의함.

○ 특기사항

- 안정적이고 경제적 전력공급에 필요한 공공기술개발임.
- 목적지향적인 전략성과 기획성이 뛰어남.
- 원자력분야의 연구개발은 과기부 원자력중장기 연구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건의함.

□ 항공우주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투자확대)

○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개발사업’은 2003년이 최종 연도가 되며 2004년 4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03년 예산은 기존 총 예산보다 75억이 증액된 116억(민간 21억 포함)을 요구하고 있음. 환율변동과 해외기술협력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3년 예산 증액을 건의함.

○ ‘항공우주 부품개발사업’은 향후 항공우주분야의 기술역량확보가 국가의 주요 사업임으로 점진적인 투자확대를 통해서 각 전문 분야별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것을 건의함.

○ 항공우주부품개발사업은 2003년 산자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요구한 ‘헬기 기술 자립화 사업’의 내용이 KMH(기동형 다목적 헬기) 주요 부품 개발사업임으로 이 사업과 연구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추진체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 특기사항

-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은 ‘다목적위성 2호 개발사업과 ’항공우주 부품개발사업‘ 두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두 사업은 목표가 명확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시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리가 잘 정립되어 있고 연구의 결과도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중요한 심의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였음.
- 본 사업은 3년 동안 계속 우수(A)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업임.

□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식품의약품안전청 : 계속지원)

○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화 된 식품, 의약품 및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문제의 관리와 이들 사업을 통한 국민적 신뢰성 회복,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 사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특히, 생명공학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의약품, 식품의 증가 및 다양한 종류의 국민 건강 침해 물질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측면에서 보다 다원화된 사업내용은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현재까지 성과물에 있어서 특허 및 산업화의 성과가 미약했으나 본 사업의 성격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된 과제의 수행이 이루어져 생물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우위를 점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특히 생명공학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개발이 예측되는 생물 의약품의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시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임.
- 특기사항
 - 국가적 시급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과, 경제적 효과순으로 평가 우선 순위를 두어 평가하였음.
 -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식약청 등 간의 연구개발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본 사업의 계속 지원이 바람직함.

□ 전파방송관리(정보통신부 : 계속지원)

- 본 과제는 위성개발 3과제 (계속과제 2, 신규과제 1) 와 위성영상처리 기술 개발(계속과제), 이동형 광대역 위성 전송기술 개발(신규), 전파감시기술 개발 (신규) 등 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중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과제와 위성영상 처리기술 개발과제는 2003년에 종료단계에 있는 과제로 사업 실현성은 매우 높음.
-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요구는 각 연도별 예산 요구액이 균등하게 분할되어 있어서(요구 총예산/연구 년도)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세부 조정이 요구됨.
- 종료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된 기술수준이 세계기술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정성적 수준향상을 도모 하도록 건의함.
- 위성개발 등 과기부, 산자부를 비롯한 타 부처 유사 과제에서는 적절한 민간 기업의 재정참여(20%내외)가 있었음. 2003년 예산에 고려하기를 건의함.

○ 본 과제는 정부의 계속적 지원이 요구됨.

○ 특기사항

- 위성 통신 분야에서 타 분야 (예를 들면 한국천문연구원의 전파 관측, GPS 응용기술 개발 분야, 방송통신 매체들의 기술 개발 과제)의 기술 개발 과제들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요망.

□ 표준화사업(기금)(정보통신부 : 계속지원)

○ 본 사업은 1993년부터 계속된 IT표준화 사업으로 IT산업의 국내 호환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제임.

○ 본 사업은 ‘정보통신 표준화 지원 사업’과 ‘표준화 활동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8~9개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 2003년도에는 291.5억원을 요구하고 있음.

- 이 금액은 전년도(326억)에 비하여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표준화 활동 기반 구축 사업’의 요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결과임.
- 그러나 그 동안의 사업결과와 중요성에 비하여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과 표준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증액이 요구됨.

○ 본 사업은 IT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임. 그러나 IT 표준화 사업은 갈수록 범위가 범부처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기술수준도 급성장하고 있음으로 정부기술 표준화 부처, 타 관련 정부 부처, 산업기술협회 등과도 폭 넓은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기술수준을 정의할 수 있는 기술기준의 제정도 필요함.

○ 특기사항

-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단백질 정보공학 등 타 분야와 IT의 결합력이 급격하게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함.

□ 철도기술연구개발(철도청 : 계속지원)

○ 본사업은 기존선속도향상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효율화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실용화 사업으로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시 비수혜 지역주민 편익 제공과 물류비 절감등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임.

○ 2003년은 실용화를 위한 차량제작을 시행하는 년도로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차량제작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03년도 신청예산(210억)은 적정함.

○ 2004년에 기존선의 속도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연구비 배분순위를 정하여 사업 수행하기 바람.

- '03년 경우 틸팅차량 설계제작→기존인프라고속화기술개발→유지보수시스템 개발 순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이 순위에 의하면 인프라기술개발인 선로 구축물 및 전기 신호 시스템기술개발에 유지보수시스템개발보다 연구비가 더 배분되어야 함.

○ 이 과제는 실용화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정부출연금만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대응자금을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함.

○ 특기사항

- 물류비 절감 등 국자정책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임.
- 종합의견은 계속지원이지만 본과제의 '03년도 핵심사업목표가 틸팅차량 제작이므로 많은 예산이 요구됨. 본과제의 '03년도 사업 특성을 예산에 반영하기를 바람.

□ 첨단항만기술개발(해양수산부 : 계속지원)

○ 본 사업은 21세기에 폭증할 항만의 물류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항만건설의 건설 비용 절감(2011년까지 약 3.조 원), 부실 시공의 사전 예방, 항만 시설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적인 항만 건설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

○ 2003년도에 연구의 4대 영역과 영역별 세부 과제를 대폭적으로 재조정된 노력이 인정됨.

○ 본 사업을 포함해서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연구관리 기구의 신설이 대안이라고 판단됨.

○ 일반 용역이 아닌 출연금 형태의 지원으로의 변경이 확고히 착근되어야 할 것임.

○ 민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특기사항

- 21세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의 하나가 물류의 비경제성임. 본 사업이 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될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심의함.
-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의 실제 실현가능성을 고려함.

- 본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누구일것인가를 공공성 기여도 측면에서 심의하였음.

□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수산부 : 투자확대)

- 반도국가이면서 그동안 등한시 해오던 해양 관련 연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려는 사업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됨.
- 국력 신장에 맞추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출발된 해양 관련 연구의 종합화 사업임. 본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감안해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7개 분야에 총 21개의 세부 과제가 수행되고 있음. 분야간 및 과제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단계임.
- 지금까지 해양 연구에 직접 투입되지 않았던 국내의 잠재 연구 인력을 이 분야로 상당히 유인해야 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국제성을 감안해서 국제화를 과감히 시도해야 할 것임.
- 해양수산부의 R&D 관리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위해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R&D 전담 전문기구의 설치임.
- 본 사업이 지향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2003년도 예산은 50% 이상 증액하기를 권장함
- 특기사항
 -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산업등 해양과학 기술 연구 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신해양산업의 기반을 통한 국가 해양과학기술과 국가 위상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함.

□ 해상안전연구개발(해양수산부 : 투자축소)

-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실제 수행된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빈약함.
- 본 사업은 지난 3년 간의 조사·분석·평가에서 연속적으로 D 등급 받은 과제이며, 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해양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양 안전”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 수행 과제가 극히 부분적이었고, 예산 규모는 영세함.(5-7억원 규모)

- 우선 해양수산부가 본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다시 대폭 수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2010년 목표의 로드 맵 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업은 연구의 내용과 연구 관리 체계 (전문성 있는 독립된 기구 필요)가 대폭 개선되어 다시 제안되면 신규과제 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
- 선박의 안전성에 관해 조선회사가 해야 할 연구와 정부가 해야 할 연구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정부는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회사를 감독할 역량을 키우는 연구가 필요함.

○ 특기사항

- 지난 3년간 조사·분석·평가에서 연속적으로 “D”로 평가된 사업으로서 원점에서 재검토 대상 과제임.
- 본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임에는 확실하나, 목적 대비 하부 과제가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부에 치우쳐 있었고, 그 연구 성과도 다소 부진하여 3년 연속 “D”로 평가 받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연간 예산이 4.79억원(2001년), 7.50억원(2,002)에 불과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판단됨.

□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해양수산부 : 계속지원)

-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우리 한반도는 인구가 초 과밀하고,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매년 막대한 양의 오염물이 연안 해역으로 방출되고 있음.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또한, 세계 각국의 배타적 수역 설정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연안 해역의 오염을 저감하여 청정 해역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본 사업은 사업목표 대비 규모가 적고, 국내의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가 미흡함. 예로 bottum-up방식의 도입을 건의함.
-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범부처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함. 특히 거의 모든 해양 오염원이 육지에서 기원됨을 감안해서 본원적인 오염 관리가 필요함.
- 선택과 집중 원칙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연해안 환경 개선 기술 개발>의 하부 과제를 대폭 개발하여 확대하고, 타 과제는 해양수산부의 고유 사업으로 가능한 한 전환하여 R&D 사업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폭 증액되어야 하나, 연구 관리 능력의 향상과 보다 폭 넓은 연구인력의 참여와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증액하여야 함.

○ 특기사항

- 연안해역 오염문제가 국가 발전 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우리자손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어야 할 공공성을 검토함.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환경부 : 투자확대)

○ 환경부의 중점사업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

○ 환경기술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및 자연 환경을 질적으로 제고시키며, 국제환경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 친화적 공공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임.

○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초의 계획된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기사항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공공기술개발임.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건설교통부 : 적극지원)

○ 이 사업은 법적근거(교통체계효율화법)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반영된 분야의 사업임.

○ 국내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교통기술에 대한 접근은 타당하며, 이를 통해 21세기 선진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물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전략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됨.

○ 지금까지 국내의 교통기술에 대한 투자미비로 인한 안전, 환경, 물류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며, 교통수송을 신 산업분야로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사회안전 등 간접적인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의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특기사항

- 차세대 대중교통개발기술 중 하드웨어 관련부분은 민간기업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자원부의 유관 사업과 유기적 연계방안의 검토가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기획의 조정이 요망되나 이 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파급효과가 큰 데에 주안점을 두고 높이 평가하였음.

-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체 R&D에서 건설교통분야의 비중이 0.71%(2001년)로서 선진국(미국 9%)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국가 SOC의 부족, 교통혼잡 및 물류적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분야의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건설교통기술 수준을 선진화하는 정책추진이 요망됨.

□ 방사선기술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 지원필요)

- 세계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RT 이용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첨단기술의 기초 및 응용과학과 산업기술개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임.
- 하나로 활용분야로서 RT와 최첨단기술인 NT, BT 등과 융합하여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이 요구됨.
- 특기사항
 - 원자력진흥계획의 성공적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산업계, 의료계에 파급효과가 큼.
 - 기초 및 응용 과학과 산업기술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임.
 - 이 사업은 최종평가에서 제한적인 선택으로 “적극지원필요”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심사결과가 우수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에서 특별한 고려가 요망됨.

□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기상청 : 지원필요)

- 이 사업의 심의 평가 주안점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의적절성에 두었음.
- 전세계에서 위성보유국 34국, 자체 위성개발국 24국인 점에 비추어 통신방송 기상위성 개발 연구는 우리 나라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추진해야할 사업임.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의 공동협력사업으로서 학제간, 산업간 협동연구 사업임.
- 위성을 이용한 광범위하고 정밀한 기상, 해양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관련기초 과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빈번한 악기상 발생을 조기 예보함으로써 재해 예방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차세대산업응용기상기술개발(기상청 : 재검토)

○ 본 사업의 응용 기상 정보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꼭 개발하여야 할 기술이지만 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공 기술연구 계속 사업 중 “기상 지진 기술 개발 사업”에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함.

○ 특기사항

- 심의중점 point는 연구의 효율성, 연구의 경제성가치, 기술개발 효과에 중점을 두고 심의
- 본 사업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이고 재해 피해를 소규모하기 위한 응용기술 개발 과제임.
- 그러나 요구 예산의 크기나 연구업무가 소규모로 적정하지 못함으로 기상청 과제와의 통합을 요구하였음.

□ 미래보건의료전략기술개발(보건산업진흥)(보건복지부 : 적극지원)

○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화하기 위한 미래 신기술의 선택 및 개발이 필요하나 2003년 미래보건산업으로 추진계획한 신약을 위한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신기술의 집중지원을 통한 기존의 프론티어사업 등 신약개발사업과의 차별화를 시도

○ 본 신기술의 경우 추진은 시급하므로 타연구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분야는 기존의 바이오보건사업을 증액하여 지원함을 제안함.

○ IT, BT, NT 신기술 융합을 통한 보건산업기술의 개발은 국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나갈 전망이 크므로 국가주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특기사항

- 과학적 기술동향분석과 기술 로드맵 분석에 의한 후보사업의 도출 및 신기술, 일등상품, 일류기술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순위평가를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업기획이 우수함.

□ 나노보건기술개발(보건산업진흥)(보건복지부 : 지원필요)

○ 나노기술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기술혁신효과가 전 산업에 파급될 경우 그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을 초래할 것이며 성공할 경우 경제발전 단계를 한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본사업 기획이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병렬식 사업추진 체계로 구성되어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성이 결여되어 있음.
- 따라서 개발 초기 단계에 전문가 집단이 성숙되고 확대되어 부분간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강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사업단으로 재구성 할 필요가 있음.
- 상당히 기술 축적이 되어 다음 단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각기 분야별 독립적 사업단 운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특기사항
 - 국가차원에서의 시급성, 인프라, 국민보건 순으로 중점순위를 두어 평가 하였음.

□ 헬기기술자립화사업(산업자원부 : 지원필요)

- 동 사업은 막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과학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 및 향후 연속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국가적 헬기 소요를 감안할 때, 국가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함.
- 동 사업은 계속과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항공우주기술 개발사업’ 중 ‘항공우주부품 개발 사업’ 과 매우 유사함으로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함.
- 특기사항
 - 중점심의 point는 국가전략과제, 국방부와 상호 협력과제, 경제적 효과 기대 가능 사업임.

□ 신소재건강기능식품연구개발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 재검토)

- 식품의약품이 기능성식품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이 분야를 규제하여 국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할 식품의약품 고유업무와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서 재검토를 요하며 사업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안정성 및 기능성 평가시스템 구축사업분야를 기존안정성 사업을 강화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 기획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특기사항
 - 본 사업을 식약청이 수행하여야 하는지, 국가적 시급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3.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가.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기준

□ 심의 기본방향

- 심의 위원회는 2003년도 중점 투자 방향 및 사전조정 심의지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자원의 전략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차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을 심층 검토하였음.
- 심의는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여
 - 심의 대상 사업이 국가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함.
 - 정성적 의견을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함.
 - 각 연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이 제시 되었는지를 검토함.
 - 조분평 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심의하였음.
-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누어 계속사업은 차년도 추진계획을, 신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 심의기준

- 심의는 제출된 자료와 조분평 결과 및 사업설명 내용에 근거하여 토론을 거치되 합의에 의하여 심의서를 제출하고 종합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종합의견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로 구분하고 신규사업은 적극지원, 지원확대, 재검토요망으로 분류하되 조정의견과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 계속사업의 경우, 3:4:30이 되도록 하고
 - 신규사업의 경우, 비율이 심의지침에 제시된 Zero-base로 심의함.
- 신규사업 중 100억 이상의 사업은 연구기획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하였음.
- 각 사업별로 심의의 중요 관심사항을 특기사항에 적시하여 사업심의의 주요 점을 나타냄.

나. 심의결과 종합

□ 계속사업

사업수 \ 우선순위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	계
사업수	8	13	8	29
비율(%)	28(%)	44(%)	28(%)	100(%)

□ 신규사업

사업수 \ 우선순위	적극지원필요	지원필요	재검토 요망	계
사업수	1	1	1	3
비율(%)	33.3(%)	33.3(%)	33.3(%)	100(%)

□ 종합의견

-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은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심의대상 사업 예산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주요 연구사업 분야로서, 2002년도 예산(1조 2000여억원)에 비해 2003년도 예산, 1조 8000여억원으로 증가 요구되었음.
- 산업기술은 원천기술과는 달리 산업 현장에서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므로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제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연구개발 분야이므로 예산의 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특히, 국책연구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민군겸용 기술개발 등 산업기술개발사업은 미래 핵심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속 확대 지원되어야 함.
- 다만,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전략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003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서는 사업추진 부처간에 충분한 사전조정을 통하여 범 국가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부처별로 때로는 부처 안에서도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중점 투자방향을 정하고, 관련 부처간에 사전 조정을 통하여 역할 분담을 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범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어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사업별 우선순위

○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부 처	사 업 명	2002년 예 산	2003년 요 구	우 선 순 위
건설교통부	산학연공동연구	15,080	105,000	투자확대
과학기술부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68,000	218,000	투자확대
	국책연구개발사업(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58,250	140,810	투자확대
	민군겸용기술개발(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17,460	23,000	계속지원
	지역간기술혁신협력사업(2IP)	-	5,000	계속지원
국 방 부	민군겸용기술사업	8,200	8,600	계속지원
농 립 부	농림기술개발	41,228	47,121	투자확대
문화관광부	게임기술개발사업	800	1,200	투자축소
산 립 청	특정연구개발출연	100	500	투자축소
산업자원부	공통핵심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48,000	66,000	투자확대
	디자인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13,000	19,000	계속지원
	민군겸용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9,200	13,000	계속지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129,080	170,000	투자확대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17,000	18,500	투자축소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6,350	12,000	투자축소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84,300	130,000	투자확대
	차세대신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45,700	75,000	계속지원
	청정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35,000	50,000	계속지원
	표준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8,000	10,500	계속지원
	핵심기반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28,700	85,000	계속지원
정보통신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기금)	304,200	302,500	계속지원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기금)	40,000	29,200	계속지원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기금)	10,000	9,800	투자축소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38,102	46,350	계속지원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14,185	30,500	투자축소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5,035	25,100	투자축소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6,580	20,750	투자축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99,312	140,000	투자확대
해양수산부	특정수산기술개발	5,351	6,560	계속지원

○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부 처	사 업 명	2002년 예 산	2003년 요 구	우 선 순 위
중소기업청	기업협동형전략기술개발지원	-	11,000	적극지원필요
중소기업청	조달시장연계신제품연구개발	-	9,000	지원필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연구회지원	-	5,100	재검토요망

다. 사업별 심의 결과

□ 산학연공동연구(건설교통부 : 투자확대)

- 본 사업이 전년도까지 소규모 단기지원 방식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에 적합한 연구기획과 사업계획으로 전환은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예산증대가 요구됨.
- 국가신규 SOC의 경제적 공급과(연간 80조원)기존 SOC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부분 R&D의 확대가 필요
- 특기사항
 - 본 사업은 예산 증액의 타당성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 투자확대)

- 미래지향적 국가과학기술사업으로 철저한 사전기획 등을 통하여 국가전략 기술을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확대가 필요함.
- 미래원천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관리제도를 도입 하고 탄력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됨.

□ 국책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 투자확대)

-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과 연구개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2005 년까지 인프라 확충”과 “2015 년까지 국제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달성의 기술 개발 계획”이 잘 반영됨.
- 국가의 총체적인 기술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 및 연구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추진 중이므로 적절함.
- 전년도 예산대비 2003년도 신청예산규모가 대폭 증가되었으나, 사업내용이 전통주력산업기술개발과 미래 주요 과학기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 내용이므로,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 규모는 증가되어야 함.

□ 민군겸용기술개발(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민군의 연구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민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 확보하고 제품화하여 민간 시장 및 군수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규모의 확대, 군수조달 비용의 절감,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됨.

- 특히 획득한 민군겸용기술의 활용측면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민군기술정보 교류사업 과 민군기술 이전 사업은 민군 기술개발 기관을 하나의 NETWORK 으로 묶어 상호 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자원의 실질적인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투자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간기술혁신협력사업(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화 기술개발 (산자부), 지방과학 기술혁신사업 (과기부),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 (과기부), 지역기술혁신 센터 (산자부),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산자부), 테크노 파크 조성사업(산자부), 지역진흥 기반구축 (산자부), 지역환경기술센터 지정.운영 (환경부) 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지역 특화 기술의 경우 상기 사업을 활용하도록 하고, 본 사업에서는 수요조사와 산업화 핵심 원천 기술을 도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방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려는 사업목표에는 상기에 열거된 많은 과제들과 목적이 일부 유사하지만, 상기사업들이 대부분 지역내 전통기술의 지식집약 화를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해 2개 도시 이상 시.도에 특화되어있는 기술을 공동 으로 발굴.추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계속과제 (42개)지원으로 36억원, 신규과제 지원으로 14억원을 합하여 50억원을 요구한바, 연구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년 수준의 예산지원이 타당함.
- 특기사항
 -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및 지역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심층 토의함.

□ 민겸용기술사업(국방부 : 계속지원)

-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가 잘 정립되어 있고 대부분의 과제 수행이 군수 및 민수 분야에 공히 적용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 연구 개발 효율성 제고와 국가 기술력 경쟁 제고“의 사업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기획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기사항
 - 과기부, 산자부, 국방부의 민군겸용사업을 비교 검토하고 역할 분담을 심층 검토하였음.

□ 농림기술개발(농림부 : 투자확대)

-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생명공학실용화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생물산업분야,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생명공학기술응용분야, 특정수산물기술개발사업 중 생명공학관련 분야는 서로 중복성이 있어 보이나, 생명공학연구의 농업분야 응용에 관한 연구이므로 중복문제는 없으며,
- 본 사업은 그 효율성이 인정되나 한정된 사업비 규모로 소규모과제 형태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미흡하므로, 특성화 및 대형화 형태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 단, 산림청의 임업특정사업은 도시의 공기정화를 위한 산림의 연구를 위주로 하고 농림기술은 임산가공 분야를 위주로 지원 할 필요성이 있음.
- 특기사항
 - 사업내용의 구성과 예산내용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게임기술개발사업(문화관광부 : 투자축소)

- 게임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 계획은 문화관광부 산하 (재)게임종합지원센터 기술개발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 즉 게임제작엔진도 개발하기 곤란한 예산규모로 국가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 판단됨.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특화전략이 요구됨.
- 따라서 게임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특기사항
 - 사업의 기대효과와 유관 사업과의 비교 및 연계 가능성을 중점 토의함.

□ 특정연구개발출연(산림청 : 투자축소)

- 임업은 산업적 기능보다 공기정화, 푸른공간 제공, 홍수예방, 자연생태계의 보존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와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공익적 기능이 더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산림청 기관고유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특별히 도시의 공기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는 농가 소득 증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우리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에 관한 유일한 R&D 과제으로써 연간 1.5억원은 너무 작은 규모이므로, 사업내용의 대폭 수정이 필요함.

○ 특기사항

- 산림청의 임업특정연구사업중 소득증대산업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임산 가공분야에서 흡수하여 지원 할 필요성이 있음.

□ 공통핵심기술개발(산업자원부 : 투자확대)

○ 전통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전 산업체에서 필요한 공통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함.

○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가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 환경변화에 대처를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됨.

○ 본 사업이 산업경쟁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사업으로 2002년 예산 480억에 비해 37.5% 증가한 660억원을 신청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됨.

□ 디자인기술개발(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향후 정부가 집중 육성키로 한 6T사업 이전에 이미 '98년 제1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청와대)에서 집중육성키로 한 4대 지식기반산업의 하나이며, 6T산업 육성정책으로 개발된 신기술을 상품으로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요사업이므로 국가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임.

□ 민군겸용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민군겸용 기술의 개발은 국가간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여 국가간 기술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현재 진행중인 계속과제의 경우, 국가 안보 역량과 산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이와 아울러서 신규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의 경우 기 개발된 결과를 실제의 산업환경과 안보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의 발굴과 이를 적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견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추진 예정인 신규 추가 과제의 경우 군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의가 요망됨.

○ 특기사항

- 국방부, 과기부 사업과 연계성 및 중복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가 있었음.

□ 부품소재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투자확대)

- 국내의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 자립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수입대체 위주에서 수출주도 산업으로 21세기 새로운 부품·소재를 개발, 수출주력 품목으로 성장 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함.
- 전문인력을 산업현장에 파견하는 계획은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하되,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에 대학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품목에 따라서는 선진 외국기업과 합작 또는 자본유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수출시장 개척에도 면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투자축소)

- 미 활용 특허기술 및 대학/연구기관 보유 신기술을 실용화하는 것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과제 선정 기준이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50%로 일관적으로 정해졌으나,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평가 배점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
- 실용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화를 위한 신제품 생산설비 구축관련 지원방안 등 후속조치 강화가 필요함.
-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의 큰 틀을 가지고 실용화 기술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의 유사사업에 대한 연구 분야별 역할 분담이 요구됨.
- 신규 과제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므로 투자축소
- 특기사항
 - 본 사업과 연계추진을 검토할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신기술 Idea 사업화 타당성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이전지원사업
 -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

□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투자축소)

-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부처간 통합 된 기술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요구됨.
- 본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연구기반조성사업이나, 산업기술개발,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에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하므로 전자 상거래 관련 정부 투자사업의 관리 및 평가기관에 대한 단일화가 요구됨.
- 2003년의 전략과제 개발을 위해 요청한 24억원에 대한 사업목표 , 선정기준 및 기대효과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므로, 분명하고 가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됨.
- 특기사항
 -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범부처적인 협의체가 필요함.

□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투자확대)

- 주력기간산업 및 첨단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사전기획을 추진 하고, 기술수요자 중심으로 산학연이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어 연구 예산의 투자 확대가 요망됨.
- 기술개발 목표와 추진체계가 적절하며, 매출 및 수출확대 등을 고려한 핵심 기술 개발체제는 높이 평가됨.

□ 차세대신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지식기반 신산업을 창출하여, 국가에 필요한 핵심주력산업이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하여 위험부담이 큰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하여 중장기적 으로 핵심산업의 창출이 기대됨.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위과제의 예산 증대도 필요함.
- 특기사항
 - 산업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여부를 집중 검토하였음.
 - 다만, 위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초기단계에서 기술료 및 민간참여 부담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도 필요함.

□ 청정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은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요구됨.
- 특기사항
 - 사업성공시 40%(중소기업 30%)에 해당하는 과다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업에 청정생산기술을 확산하려는 본 사업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기술료 징수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표 및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시 요망.

□ 표준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은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요구됨.
- 특기사항
 - 사업성공시 40%(중소기업 30%)에 해당하는 과다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업에 청정생산기술을 확산하려는 본 사업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기술료 징수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표 및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시 요망.

□ 핵심기반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부처간 통합 된 기술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요구됨.
- 본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연구기반조성사업이나, 산업기술개발,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에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하므로 전자상거래 관련 정부 투자사업의 관리 및 평가기관에 대한 단일화가 요구됨.
- 2003년의 전략과제 개발을 위해 요청한 24억원에 대한 사업목표 , 선정기준 및 기대효과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므로, 분명하고 가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됨.

○ 특기사항

-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범부처적인 협의체가 필요함.

□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기금)(정보통신부 : 계속지원)

○ 정보통신기술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이므로 국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함.

○ 향후에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점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결과가 국제적 우위를 달성하는 전략도 필요함.

○ 다만, 전략 과제의 선정 시 부처간의 협의와 필요시 해외 기술 도입 등도 검토되어야함.

○ 특기사항

-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였음.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기금)(정보통신부 : 계속지원)

○ 정보통신산업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광범위한 정보통신분야의 비교우위를 설정하고 국내외 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지속적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

○ 사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기술료 징수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적극 발굴을 통하여 단기적 목표달성이 필요함.

○ 특기사항

- 사업의 단기적인 효과 및 타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함.

□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기금)(정보통신부 : 투자축소)

○ 정보통신분야의 기술력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구체적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은 충분하지 못하며, 기술료 징수실적 등이 높지 못한 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며 투입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망됨.

○ 중소기업청, 산자부 및 과기부 등과의 연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기사항

- 사업의 효율성, 기대효과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음.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청 : 계속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연구인프라의 지원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연구인프라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게 함으로서 기술발전의 원동력을 얻고자 하는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 사업의 대상인 중소기업이 30만 개소에 달하는데 반해 연간 지원 대상 기업이 1%인 3천여개소에 불과하여 선진국수준의 중소기업기술연구기반을 조성하기에는 30~40년이 소요될 형편이고 기업이 거둔 연구성과의 확대보급 및 재투자효과도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투자 확대가 요망됨.

○ 현대의 빠른 기술주기를 고려할 때, 이 사업과 같이 기초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은 국가지원 기간을 조기에 완료하고 기업중심의 자율적인 사업단계로의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위주로 한 장기년차 계획보다는 목표년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여 장기적인 융자나 기금 등을 활용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충분한 지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기사항

- 차년도 신청 예산을 사업 내용과 비교하여 중점 검토하였음.

□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청 : 투자축소)

○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노동부의 작업환경개선 사업 및 중기청의 구조개선 사업과 협조가 요망됨.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현장 직무기피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자동화 장비등을 개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기피요인으로 작업환경 개선이외에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불분명함.

○ 사업추진 체계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이 분명치 않고, 2003년도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만을 위해서는 투자축소가 바람직함.

○ 특기사항

- 타 사업과의 중복성과 본 사업의 기대효과를 심층 검토하였음.

□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중소기업청 : 투자축소)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가 신청한 신기술 아이디어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을 조사 분석, 평가해 주는 사업으로서 제안되었으나, 기술 주체인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기술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정부지원이 타당하지 않음.
- 기술성, 사업성 및 경영역량과 사업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신기술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나, 객관적 사업 선정전략 방법 제시가 미흡함.
- 신기술 타당성 평가대상 과제 선정 요건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구체적인 과제선정의 전략성이 미흡함.
- 사업주관부서 자체의 객관적 분석자료 미흡으로 년도별/단계별로 기술개발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타당성 평가예산과제 대비 평가지원과제 수가 적어서, 2002년도 예산 5,035백만원에서 2003년도 예산은 25,11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차년도 연구개발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검토 불가능함.
- 특기사항
 - 사업 성격 및 평가 기관에 대한 집중 심의가 있었음.

□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중소기업청 : 투자축소)

-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장성, 구현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요분야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설정이 필요함.
- 중소기업 기술이전 사업은 기술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사업력이 부족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제품화하는 사업으로서 성공할 경우 기업은 주요기술을 확보하고, 학연은 연구결과를 실현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기업의 경우 기술의 이해가 부족하고, 학연의 경우 시장성과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패 가능성이 높고 실패하는 경우 기업의 기술이해도가 낮으므로 파급효과도 미흡할 것임.
-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의 가치와 시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과 지원체제(기술거래소, 기술이전센터 등)를 갖추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전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용화연구단계를 지원하거나 기술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중소기업혁신사업으로 유인하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 사업효과가 인정되는 기간동안은 확대투자를 지양하고 사업효과를 정확히 계량할 필요가 있음.

○ 특기사항

-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것을 집중 검토하였음.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청 : 투자확대)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실현가능하고 그 효과도 높았음을 제시된 성공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당해 중소기업의 능력과 주변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한 바, 본 사업의 경우 동종기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술분야에서 기술소유자의 기술을 제품화하는 사업이므로 기술의 이해, 파급효과도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참여에 의한 기술혁신을 위하여 아주 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확대투자가 필요함.

○ 특기사항

-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를 심층 토의하였음.

□ 특정수산물기술개발(해양수산부 : 계속지원)

○ 수산물기술개발은 수산업 지속성,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 균형발전 및 소득 증대, 국가 식량자원 보존등의 공익적 기능이 높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

○ 개별 과제의 연구성과와 사업 추진체계가 우수함.

○ 한정된 예산을 해양환경 부터 수산경영 정책까지 수산물 기술 연구 전 분야에 투자하므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예산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예산 지원 필요함.

□ 기업협동전략기술개발지원(중소기업청 : 적극지원필요)

- 상업성이 강한 연구개발투자를 목표로 기업간 공동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공동 연구기업들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보완 및 신제품으로 이어질수 있어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특기사항
 - 신규 과제로서의 본 사업에 대한 기획 보고서의 타당성을 심층 검토한 결과 적극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조달시장연계신제품연구개발(중소기업청 : 지원필요)

- 본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연구개발 목표와 동시에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기관이 연구개발 품목을 선정하여, 수요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중소기업청의 지원하에 중소기업이 개발, 사업화하고 연구개발 품목을 제안한 기관이 구매하는 사업추진 체계임.
-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요 창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부부터 시작함은 바람직함.
- 특기사항
 - 신규 사업으로서의 타당성과 연구 사업 내용, 구매 보증 절차,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 중소기업기술연구회지원(중소기업청 : 재검토요망)

- 업종별조합 및 협회단체등과 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간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나, 유사과제로 산학연 컨소시엄, 산업기술 연구조합 등이 있으므로 이들 사업을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로 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25개 연구회에 2억원씩 지원하여 총 51억원 (운영비 1억원 포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25개 연구회에 대한 기술적 내용이 없어 신청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특기사항
 -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있었음.

4. 연구기반조성사업 심의위원회

가.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기준

□ 심의 기본방향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장기 기본전략 방향과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 및 사전조정 심의지침에 부합하도록 심의 기본방향을 설정함.
 -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우수인력 양성과 활용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지원기로 함.
 - 아울러, 연구기반조성사업 심의위원회의 특성을 살려 R&D의 실질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에 비하여 기반구축의 성격을 띠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함.
- 2002년 조사·분석·평가 결과, 사전조정 심의 결과, 사업설명서 및 보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였음. 이를 위하여 중점검토위원을 2인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심의함.
 - 모든 과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되, 계속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각각 2인(장·부)의 중점검토위원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하도록 함.
 - 사업설명회에는 모든 심의위원이 참여하되 중점검토위원에게 질의사항을 전달하여 중점검토위원이 정리·질의하며 보충자료 등 요구
- 심의회의에는 중점검토위원이 심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을 작성해 온 후 초안에 대하여 전원이 참여하여 토론을 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심의.
 -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심의 위원 4개의 과제에 대하여 ‘정’, 다른 4개의 과제에 대하여 ‘부’의 중점검토위원 역할 담당

□ 심의기준

- 신규사업은 계속사업과 분리하여 심의하되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과제는 연구기획보고서 인정평가를 우선으로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제 수를 극히 제한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기획보고서에 사업목표, 세부추진내용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심의대상으로 채택 또는 제외함.
 - 정성적 심의의견을 기준으로 적극지원, 지원필요, 재검토요망으로 구분.

- 계속사업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였으며,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 유망 신기술 및 기초과학지원을 위한 대형 공동연구장비, 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음.
- 양적인 확대 보다는 질적인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복 방지와 부처간 사업의 연계화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함.
- 정성적인 심의의견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의 3등급으로 구분하되 30%, 40%, 30%의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난 해 사전조정 심의결과를 참고하며 중점검토위원이 심의의견을 개진하면 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동의를 구하여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의 등급을 잠정적으로 결정.
 - 전체적인 등급 배분비율 등을 고려한 후 등급의 상대적인 배분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잠정결정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등급 재결정. 하지만, 심의가 원만하게 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없었음.
 - 사업간의 중복, 연계 등의 권고의견은 특기사항이나 조정의견으로 제시.
- 신규 및 계속사업의 등급 결정이 완료된 후 정성심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문구를 다듬어 각 사업별 심의의견서 완성

나. 심의결과 종합

□ 계속사업

우선순위 사업수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	계
사업수	10	14	10	34
비율(%)	29.4	41.2	29.4	100

□ 신규사업

우선순위 사업수	적극지원필요	지원필요	재검토 요망	계
사업수	3	3	3	9
비율(%)	33.3	33.3	33.3	100

□ 종합의견

- 연구기반조성사업의 총 신청 예산규모는 1,583,85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3.8% 증액되었으나, 인력양성사업은 최근의 과학기술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4.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기존 사업의 경우, 인력양성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상향조정되었으며, 우수 연구집단 육성, 지역기술혁신사업, 공동연구설비지원사업들이 대부분 상향조정되었는 바, 이는 치밀한 사전기획과 체계적인 추진노력에 의한 효과성, 효율성을 반영한 것임. 이는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에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연구기획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함께 확대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 신규사업의 경우, 공동연구시험설비인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 ‘국제상호인정 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또한 시급히 확산되어야 할 학제간 연구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핵심연구센터육성사업’이 적극지원필요 사업으로 심의되었음. 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방향에 충실하게 맞추어 기획한 결과임.
- 중점 전략방향이나 선택과 집중방침 없이 산만하게 지원되어온 과제들은 낮은 우선순위를 받았음.

□ 사업별 우선순위

-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	우선 순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기초과학연구지원)	4,800	29,257	투자확대
	국가지정연구실사업(우수연구및연구리더육성)	106,860	135,000	계속지원
	국제공동연구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	11,144	23,000	계속지원
	국제화기반조성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	14,735	17,250	투자확대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기초과학연구지원)	17,498	20,000	투자확대
	연구기반구축사업	43,400	61,000	계속지원
	연구성과지원사업	10,050	15,800	투자축소
	우수연구센터육성(기초과학연구지원)	65,190	83,000	계속지원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기금)	6,100	6,100	투자축소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기금)	18,500	19,000	계속지원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	1,000	1,300	투자축소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기초과학연구지원)	25,480	36,650	투자확대
	특성화장려사업(기초과학연구지원)	8,039	10,000	계속지원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	우선 순위
교육인적 자 원 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138,222	200,000	계속지원
	산학협력촉진지원	2,000	6,500	투자축소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	2,400	3,000	계속지원
	지방대학성과제지원(학술연구조성)	4,000	10,000	투자확대
보건복지부	전염병실험장비현대화	573	2,611	계속지원
산업자원부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3,213	6,500	계속지원
	국제협력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8,300	10,000	투자확대
	디자인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9,200	14,000	계속지원
	부품소재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36,000	65,000	투자확대
	산업기술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75,200	130,000	계속지원
	산업기술인력양성(산업기술기반조성)	12,600	100,000	투자확대
	신기술창업보육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	20,000	25,000	투자확대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너지기술개발)	1,020	15,420	투자축소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29,499	40,000	투자축소
	지역기술혁신센터(산업기술기반조성)	28,000	35,000	계속지원
	지역진흥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42,500	30,100	투자축소
	지역특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48,200	55,600	투자축소
	테크노파크조성(산업기술기반조성)	30,000	60,000	계속지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기금)	102,530	71,200	투자축소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기금)	171,213	156,500	투자축소
환 경 부	지역환경기술센터지정운영	3,905	8,018	투자확대

○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	우선 순위
과학기술부	고분해능질량분석기구축사업(기초과학연구지원)	-	2,950	지원필요
	국가핵심연구센터육성(기초과학연구지원)	-	15,000	적극 지원필요
	기초의과학육성(기초과학연구지원)	-	6,000	재검토요망
	선도기초과학연구실(기초과학연구지원)	-	6,000	지원필요
교육인적 자 원 부	국가전략분야고급R&D인력양성지원	-	15,000	재검토요망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바이오산업육성	-	8,100	재검토요망
산업자원부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조성)	-	10,000	적극 지원필요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	-	10,000	적극 지원필요
	산학협동기술교육프라자(산업기술기반조성)	-	9,000	지원필요

다. 사업별 심의 결과

□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과학기술부 : 투자확대)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고급인력에게 실무 연구기회 제공, 과학기술 인력자원의 이공계 진출 유도, 창의적 과학자 조기 육성 및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사업임.
- 신규사업인 「초·중등 과학교사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종합검토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국가가 육성해야할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할 산학연의 우수연구집단을 국가지정 연구실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최장 5년간 지원, 육성함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제고라는 사업목적에 아주 적절한 사업임.
- 3단계의 엄정한 선정평가를 거친 산학연의 우수연구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업으로 인력과 시설 및 수행능력을 이미 검증받음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최근 중요성이 부각된 6T분야와 분야간의 융합 및 복합기술의 전략적 지원 확대가 요구됨.
- 기술의 복합·융합현상을 고려하여 동분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사전 기획된 바대로 450개의 연구실에 3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450×3억=1,350억) 신청예산 규모는 적정함.
- 특기사항
 - 출연(연) 소재 지정연구실의 경우 대학과 기업과는 달리 인건비 인정이 필요하므로 지원 연구비 계상시 차별화가 필요함.

□ 국제공동연구사업(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국가간(정상) 및 장관간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은 국가의 신뢰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본 사업을 양자간 공동 연구사업과 다자간 공동 연구사업으로만 구성한 것은 적절함.
- 국제화 기반조성사업과 통합하여 사업의 수행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화기반조성사업(과학기술부 : 투자확대)

- 해외 첨단기술원천지 진출 및 거점 확보, 범 지구적 문제해결 동참 및 주요 국가와의 동반자적 과학기술협력 추진으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글로벌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에 기여함.
- ‘해외과학기술협력센터운영사업’의 경우 운영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재기획이 요구됨.
- 신규사업인 ‘외국인 과학자 유치기반구축사업’은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을 증액하여 국제학급 설치·운영 뿐만 아니라 숙소 및 문화시설 등의 건설도 2003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함.
- 과학기술 국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투자확대가 요구됨.

□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과학기술부:투자확대)

- 포항제철이 1400여원을 들여 가속기 본체를 건설한 이후,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빔라인의 추가건설비용 및 시설운영 비용은 (연간 약 200억원) 정부가 지원해오고 있음
- 이러한 빔라인 증설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내 유일의 대형기초 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 장차 NT, BT, IT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국내 기초연구기반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관련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외국 가속기연구소와의 공동연구나 연구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동일 연구 분야에서의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자체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장치 시설의 기업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바, 현재까지 운영을 전담해온 가속장치 전문가들이나 포항공대 교수진 이외에 외부인사를 운영책임자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특기사항
 -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포항가속기를 미국의 NASA와 같은 국가 첨단과학 견학현장으로 지정하여 유료방문사업 추진이 바람직함
 - 이 사업은 기초과학육성, 첨단장비의 국가전략 기술발전 활용, 첨단장비의 국가전략 기술발전 활용, 대형장비의 공동활용 등이 심의 핵심임.

□ 연구기반구축사업(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본 사업은 고가의 공동연구시설구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경쟁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R&D활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임.
-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목표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지고 있는 바, 계속지원이 바람직함. 단, 신규사업의 경우 3개 사업(나노 리소그래피 장비, 전력반도체 첨단화 기반, 생물대사 물질 연구기반구축)의 사전기획에 대한 자료미비로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 신규사업(3개)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를 감안할 때 신청예산 규모가 과다함.
 - 광양자빔 연구시설의 경우 선행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관계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계속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 특기사항
 - 나노급 리소그래피 장비구축 사업(신규)은 나노 Fab 구축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지원사업(과학기술부 : 투자축소)

- 기술이전촉진과 연구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동사업의 취지는 시의 적절함. 그러나 세부사업내용 중 일부는 사업목표에 무리하게 연계시킨 면이 존재함.
 - 특허지원사업의 경우 선정과정에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예 : 사전스크린제)이 필요함.
 - 원천기술실용화사업과 신기술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일부사업이 타부처의 사업과 중복성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재조정이 필요함.
- 기술이전조직지원사업 중 기술수출종합지원사업은 사업 자체가 시장경제 내에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함.
- 원천기술실용화지원의 경우
 - 이미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사이버테크노마트 : KISTI, 한국기술거래소)임.

-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경우도 이미 여러 부처(산자부, 정통부, 중기청)에서 시험중에 있음.
- 연구개발전문기업의 육성은 정부의 역할이기보다는 민간조직을 활용함이 보다 바람직함.

○ 특기사항

- 원천기술실용화지원사업과 신기술창업지원사업은 타부처 유사사업과의 중복성이 높으므로 전면 재검토하거나 이관이 필요함.

□ 우수연구센터육성(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우수연구센터 사업은 10년 이상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얻어 정부가 수행하는 연구 사업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식되며, 국내 대학들로 정부가 수행하는 간판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대학의 지속적인 연구기반 구축 및 우수연구집단 육성은 기초과학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폭을 강화하고 SRC와 ERC간의 연구비가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료되는 연구센터들의 자립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특기사항

- 이 사업은 대학의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능력 집중화, 기초과학 및 인력양성이 심의 핵심 사항임.
- 후속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계속확대 방안과 신규사업간의 정책적 선택 문제가 논의된 바 있음.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과학기술부 : 투자축소)

○ 단기간 지원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에 이전되거나 기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과제를 지원함. 기업참여를 의무화 함은 원자력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에 적절한 전략임.

○ 그러나 지나치게 단기·소규모 과제에 분산되어 지원함으로써 성과도출이 미흡하므로 전략적 계획에 의한 지원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 본 사업에 2001년도까지 630억원 (정부 210억원)이 투자된 것에 비해, 기업 창업과 기술료 징수는 미약한 편임. 수입대체 제품, 현장애로, 안전현안기술 등의 달성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지원하는 것이 투자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임.

□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과학기술부 : 투자축소)

- 원자력기술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원자력기술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은 IAEA 등 협력으로 공동연구, 인력양성, 국제회의 유치 등을 추진하는 적절한 사업 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중장기 계획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공동으로 기획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정부출연금 지원보다는 원자력기금으로 점진적 전환이 요구됨.
- 유사한 성격의 하부단위과제들을 통합하고 단위사업비 규모도 조정한 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요구됨.
- 특기사항
 - 중점심의 point : 원자력기술 수출도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과학기술부 : 투자확대)

- '95년부터 시작한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은 센터와 지역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00년도에 37개 센터에서 556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42건의 특허등록 실적이 있음.
- 또한 938개의 산업체에 2,716건의 기술지도를 하였고, 기술이전 600건, 상품실용화 296건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지방대학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성화장려사업(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고가 특수기기, 특수연구소재은행, 전문연구정보센터의 실적은 활용성 부분에서 성과가 있음.

○ 특성화 장려사업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진행 중으로 통합적 개선 방향과 발전 방안이 마련중임.

○ 그러나, 세가지 사업내용들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세부사업별 재조정이 필요함.

- 전문연구정보운영 지원사업은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된 후에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기사항

-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고가 특수기기의 경우에 높은 활용도의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기초과학 육성,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이 본 사업 심의의 핵심임.

□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교육인적자원부 : 계속지원)

○ BK21사업의 대학원중심대학을 육성 지원하여 세계 10위권 대학진입과 우수 인력양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임. 과학기술, 인문, 지방대학 등 58개 사업단의 지원은 당초 목적달성을 희박하게 하므로 사업단의 선택과 집중지원이 필요함.

○ 2002년 1단계 자체 사업중간평가실시(2002. 6. 실시중) 결과에 따라 사업단 내용의 조정/개편이 요구됨.

○ 총 사업비의 80%만이 지출되었고, 1356억원중 377억원이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예산 증액신청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규모 조정이 필요함.

○ 당초 사업 목표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나, 그 결과 연구사업비의 ‘부익부 빈익빈’ 결과를 초래하고 지방대학교의 연구인력 공동화 현상 등 문제점이 예상됨.

○ 특기사항

- BK 21 사업은 정보통신, 기계 등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수인력 양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
- 2001년 책정된 총사업비의 80%를 지출하고 특히 국제협력사업(장기 해외 파견)은 29% 만 지출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음.

□ 산학협력촉진지원(교육인적자원부 : 투자축소)

○ 본 사업의 추진 목표 대비 사업내용이 산만하고 짜임새가 미흡함.

- 하위 그룹의 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부적합한 예산 집행이 관리되지 않는 등 사업의 관리 및 감독체제의 문제점이 있음.
- 전문대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운영이 적합치 않으므로 전문대 우수연구소 지원사업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개선안
 - 1안: 본 사업을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 전문대 우수산업연구소 지원 사업과 차별화 추구.
 - 2안: 전문대 우수산업연구소 지원사업의 기자재 구입과 인력양성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종합적으로 사업 추진.
- 향후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훈련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재편하여 기본적으로 인력 양성 사업으로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산업대, 기술대, 실업계 고교까지 단계적인 직업 교육 훈련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
- 특기사항
 - 이 사업의 목표인 산학협동 우수 전문대학의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과 취업률 향상 제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우수 산업연구소 지원사업과 그 목적과 지원분야가 중복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교육인적자원부 : 계속지원)

- 우수 공업계 전문대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기간사업분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우수산업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임.
- 기존사업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인력부분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원 타당성은 있으나 산학협력촉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습, 교육용 기자재의 구입과 운영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함. 또한 구입한 기자재의 활용대상에 중소기업 직원의 재교육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학협력촉진사업과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특기사항
 - 산학협력 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에 필요한 실험용 기자재의 구입을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 직원의 재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함.

□ 지방대육성과제지원(교육인적자원부 : 투자확대)

- 본 사업의 목적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전염병 감시 차원에서 국립보건원의 노후장비 교체, 첨단장비 보완을 위한 것임.
- 본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장비교체 및 첨단장비 구입은 본 사업 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필요하므로 예산 신청시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국립보건원의 경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염병실험장비현대화(보건복지부 : 계속지원)

- 본 사업의 목적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전염병 감시 차원에서 국립보건원의 노후장비 교체, 첨단장비 보완을 위한 것임.
- 본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장비교체 및 첨단장비 구입은 본 사업 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필요하므로 예산 신청시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국립보건원의 경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기반확보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제기술협력기반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창구일원화 등을 위한 종합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본 사업에서 신규로 추진 중인 “국제산업기술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산업자원부 내의 국제기술협력기반 구축사업을 종합기획한다는 전제 하에, 계속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사전조정심의 결과 “투자축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23% 증가한 사업비를 요청하여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

□ 국제협력기술개발(산업자원부 : 투자확대)

- 과학기술의 첨단화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과 위험도를 감축시키고, 국내 기술개발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술 협력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내용이 IT, BT, NT 등 신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비전과도 일치함

○ 치밀한 사전기획과 관리 전제 하에 본 사업을 확대추진하여야 할 것임

- 상대국과 사업비 분담 5:5 출연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자원분담이 합리적이며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
-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공동기술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할 필요 있음

○ 특기사항

- 국제간 R&D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사업의 경우 양국간 협정에 근거하고 있고 사업비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적극 지원이 필요함.

□ 디자인기반구축(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2000년도에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신설된 사업으로 2003년도 부터 독립적인 사업으로 분리될 예정임. 디자인에 대한 장비, 인력, 정보 유통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디자인·브랜드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주요분야인 1) 산학연공동연구기반 구축은 여러 대학에 지역별로 분산 지원하는데, 이러한 분산지원과 병행하여 2) 정보화 및 마케팅기반과 3) 브랜드 및 포장기반 구축은 전문성을 가진 국가출연기관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효율적임.

○ 국내 디자인 기술의 제고를 위한 예산요구가 적절함.

□ 부품소재기반구축(산업자원부 : 투자확대)

○ 현재 우리산업의 취약부분인 부품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산업기술기반구축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 이러한 산업의 취약성은 물론 관련제품이 국제기준의 신뢰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 수준의 평가시설이 취약한 탓에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받기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 기인하는 바도 큼. 이런 관점에서 본 사업에서 제안한 부품소재 신뢰성향상사업은 관련 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구축사업으로 시급한 지원책이 요구되는 사업임. 더구나 신뢰성 평가 장비가 고가인 점과 해당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예산확대가 필요함.

○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장비구축 못지 않게 중요한 분야이므로 현재 10억원인 예산 요구액은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할 것임.

○ 또한 사안의 시급성을 해소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제안된 추진체계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민간평가기관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임.

○ 특기사항

- 현재의 관 주도형 사업은 민간 주도의 평가센터를 운영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수요자인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평가서비스사업의 성격상 운영의 효율성 및 고급인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장차 민간인증사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기술기반구축(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산업기술의 고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 연구소에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내용을 지원하는 것은 장차 고급 산업인력 양성은 물론 신기술 확보에 매우 긴요함.

○ 또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 타당은 대단히 높음.

○ 그러나 사업추진 내용면에서 선정된 과제의 주제가 너무 산만하고 인프라 구축과는 거리가 있는 과제가 다수 포함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구축된 공동장비의 사후 활용정도 및 효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진하고 정보화 표준화 등은 타당성과 효율성이 검증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차제에 사전 기획을 재점검하여 과제의 본래 목표인 효율적인 산학연공동연구 기반 구축에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특기사항

- 공동장비 활용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 확립이 요구됨.
- 정보화, 표준화 사업의 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첨단산업, 신기술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사업은 산학연 공동연구, 산업기술인프라, 지식기반산업 육성이 심의의 핵심임.

□ 산업기술인력양성(산업자원부 : 투자확대)

- 주력기간산업의 업종별 기술인력 수급불균형 해소와 2010년 세계 5대 산업 강국 목표로 기술인력 기반 확충, 현장 맞춤형인력 양성 및 공대 교육혁신 등의 사업내용은 시의적절함.
- 일부 신규사업의 내용이 타부처 사업과 유사하며,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투자확대가 요구됨.
- 특기사항
 - 이 사업은 국가 주력산업의 기술인력 양성,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이 심의의 핵심임.

□ 신기술창업보육사업(산업자원부 : 투자확대)

- 본 사업은 대학, 연구소,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신기술 사업화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임.
- 현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5년 이후 2001년까지의 지원결과 및 시사점을 지원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는 메카니즘의 개발이 필요함.
- 이 사업은 신규창업을 통해 과학기술의 실용화 제고, 실업문제의 해소,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 TP, TIC 등과 연계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특기사항
 - 이 사업은 고용문제 완화와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계속 지원하여 향후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에너지기술기반조성(산업자원부 : 투자축소)

-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기술력의 확보를 위한 기술기반구축연구과제로서 이 사업에서 제시한 국제적정보협력사업과 정보유통망구축사업은 적절한 사업내용임.
- 인력양성사업(예산 : 125억원)을 위한 신규전문대학원 설치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 에너지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국제협력사업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 특기사항

- 국제협력사업을 에너지·자원국제협력사업으로 이관한다고 예산요구서에 기록되어 있고 국제협력사업분 예산을 제외한 예산요구를 하였음. 그러나, 사업설명회 자료의 금액과 사업내용은 이와 상이함.
- 정확한 예산요구자료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함.

□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산업자원부 : 투자축소)

○ 전자상거래 기반확보는 e- biz 확장을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기술표준화, 인력 양성 등이 선행되어야한다. 이에 비해 이 사업은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 하드웨어 확장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기술개발과제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네트워크지원사업을 축소하고 기술표준화, 전자거래제도화, 보안기술 등 특정기반기술개발 등으로 사업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기사항

- 기왕의 중소기업 네트워크지원사업은 민간 부담을 늘려 예산을 축소하여 시행하고 대신 상거래환경조성을 위한 거래제도 연구, 외국사례 집중비교 분석, 기술표준연구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본 사업을 과학기술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기술혁신센터(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본 사업은 지역의 특화분야 산·학·연 기술개발 자원을 결집시켜서 지역산업을 위한 기술개발, 우량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적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신기술 창업보육사업과는 지속적인 차별화가 필요함.

○ 본 사업의 성과를 실적 및 목표달성에 심의의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역 기술 혁신 센터의 도움을 받은 업체들의 성장 실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TIC 설치기관들이 모두 대학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각 대학의 특성화 계획, 지자체의 산업육성계획, 지역 산업의 특성, 기술기반 조성여부, 자립방안 강구 등에 근거한 추진이 필요함.

□ 지역진흥기반구축(산업자원부 : 투자축소)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특성상 지방정부의 대응자금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 주도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과 지역 보유자원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대규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사업종료 후 자립방안 등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 지역특화기술개발(산업자원부 : 투자축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산업 개발은 국토균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나, 세부구성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며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 전통산업(신발산업,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신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여야 함.
 - 사업규모에 비하여 사전기획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성과 및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중간단계의 기획수정이 필요함.
 - 신규사업 지정에 대하여 기존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철저한 종합적인 사전 기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함.

○ 특기사항

- 연구사업 재기획의 필요성
 - 현재 본 사업의 기획은 지역진흥 기반구축 사업 기획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 것으로 보임.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기술개발 사업의 성격상 연구기획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타 기술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도출 기획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적 추진과제는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조성으로 분류되기보다는 단기산업기술 내지 중장기산업기술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내년에는 환경조성사업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테크노파크조성(산업자원부 : 계속지원)

- 본 사업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노동집약, 대량생산 위주에서 기술집약, 소량·다품종의 중소벤처형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기술/ 시설/ 인력을 집적하여 지역의 기술개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지원이 필요함

○ 시범 테크노파크 6개와 신규 6개소를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기존 시범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기존사업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선정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특기사항

- 특히, 내년 중에 종료되는 시범테크노파크 6개소에 대해서는 자립방안, 향후 운영방안 등을 수립해 추후 계속사업 추진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정보통신부 : 투자축소)

○ 급속한 정보화 진전, 정보통신기술의 첨단성 유지를 위해 연구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단계별 평가체계를 갖추고, 전문기관이 사업관리를 맡도록하는 등 추진체계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정책과제를 공모하는 등 조분평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노력도 엿보임.

○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첨단성 및 비교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노력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예산배정은 미흡한 수준임.

○ 예를 들어, 2003년도 요구 예산의 사업비 구성을 보면, 연구환경조성 225억원, 연구성과확산 64억원, 정보기반구축 49억원, 정책연구 212억원으로 연구성과 확산사업비가 정책연구사업비의 1/3에도 못 미침

○ 또 전년도와 같이 2003년의 정책연구비 212억원도 일부 관련기관에만 집중 될 것으로 우려되고, 결국 경상비 지원의 또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연구확산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정책연구관련 예산 사용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정보통신부 : 투자축소)

○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 본 년도에서는 잠재인력양성 지원을 중단하고 전문인력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였는 바, 이는 인력의 고급화와 국제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임.

- 대학생 해외 연수의 경우도 학생수 보다는 개인당 수혜액을 늘이는 것이 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며,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는 개인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사업성과 지표와 세부분야별 발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수혜기관의 평가에 의한 경쟁유도가 용이할 것임.
-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축되었으나 사업내용을 감안할 때 예산 1565 억원은 적절함.

□ 지역환경기술센터지정운영(환경부 : 투자확대)

- 급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역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고,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사업의 내용을 지역현안을 위한 지역적 합의 및 해결방안 도출에 한정하고, 기술개발 등 상대적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비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현재의 바람직한 추진체제 및 방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술개발관련 사업내용을 최소화하고, 이와 관련된 추진체계는 기존의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행할 것을 권고함.
- 특기사항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은 환경이라는 본질적 특성에서 여타 연구기반 조성사업과 차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중심의 사업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 사업이 단기적인 기술적 애로사항의 해결차원을 넘어 중규모 이상의 기술 개발과제 중심으로 변질되어 다른 기술개발사업과의 중복성 여부가 제기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고분해능질량분석기구축사업(과학기술부 : 지원필요)

- 이 사업의 목표는 고분해능 FT-ICR질량분석기를 설치운영하므로, BT 분야의 새로운 고분자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기술을 제공하여 BT관련 연구 기반 조성에 실효성이 있음.
- 고분해능 FT-ICR 질량분석기가 상용화 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장비가 upgrade되고 있어 사업 시작시기의 조정이 필요함.

○ 특기사항

- 고분해능 FT-ICR 질량분석기는 마치 컴퓨터와 같아서 신종 모델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고가이나 일정시간이 지난 후 적정가격으로 고기능 장비 구입이 가능하므로 구입시기를 1-2년 후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핵심연구센터육성(과학기술부 : 적극지원)

- 모방, 응용단계에서 탈피하여 국가발전전략에 부합되는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정예 핵심 기초과학 연구집단의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점임.

- 한편 기타 연구집단 구축사업(COE, ABRL, RARC, NRL, 프론티어사업 등)을 감안하고 국내 연구인력의 현황을 고려한다면 매년 확실적으로 5개의 센터를 신규 지정하기보다는 질적으로 뛰어난 극소수의 센터를 우선 선정, 운영하고 차후 센터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킴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학제간 우수연구집단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수월성에 근거하여 매년 5개의 센터를 지정하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필요.

○ 특기사항

- 동 사업은 철저한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한 우수연구집단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추진 타당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됨.

□ 기초의과학육성(과학기술부 : 재검토)

- 생명분야 특히, 인간관련 기초의과학을 진흥시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며, 최근의 생명공학의 진전에 비추어 시의성도 인정됨.

- 이러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과학기술 투자경향 축소를 보전하는 것이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 이유임에 비추어 이 사업이 과연 시장실패에 의한 정부의 정책영역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 추진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SRC, ERC, ABRL, NRL 등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기존의 유사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진체계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었음.

- 기초의과학의 성격상 국민건강과 관련되고, 내용상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필수적이므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 이미 MRC 선정을 위한 과정을 이미 추진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상정하는 행태는 지양하거나 앞으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선도기초과학연구실(과학기술부 : 지원필요)

-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투자에 소외되었던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타당성은 인정됨.
- 5년 단위로 지원하고, 중간평가 후 계속지원여부(3+2)를 결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체계나 평가방법은 적절함.
- 다만, 2002년에 15개를 선정하고, 2003년 이후 120개로 확대하는 것은 국내 관련 분야의 연구기반을 고려할 때 여타사업과의 잠재적 중복 우려와 함께 자칫 당초의 사업목표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음.
- 2002년에 15개 ABRL을 선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신규사업으로 상정하는 것은 지양하거나 앞으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국가전략분야고급R&D인력양성지원(교육인적자원부 : 재검토)

- 연구기획보고서의 미제출로 사전조정 심사기준에 미달되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BK21 등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종합분석하여 명확한 차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기획이 필요함.

□ 지역거점바이오산업육성(보건복지부 : 재검토)

- 국가 미래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의 위치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거점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기획이 미흡함.
- 국가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지역거점 바이오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며, 바이오산업 거점지역의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산업자원부 : 적극지원)

- 본 상업에서 추구하는 바는 산자부 산하 전문시험기관의 국제상호 인정임.
- 이를 위하여 시험평가능력향상에 필요한 시험장비 구입지원 위주 사업내용임.

- 공산품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추진은 시급히 필요함.
- 사업구성에 있어 장비구입외에 국제상호인정을 위해 필요한 시험인력 양성 등 타 요인들의 문제해결도 사업내용에 포함 검토 요망.
- 사업추진이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본 사업을 산자부 산하 시험기관 뿐만아니라 타 부처 산하 공공시험기관도 추후 점차 지원대상에 포함 시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특기사항
 - 본 사업은 산자부 산하 전문 시험기관의 국제상호인정을 가능케 하기 위한 시험장비 구축사업으로 특히 중소기업체의 공산품 품질관리에 시급히 필요 하여 “적극지원”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추후 사업성격상 R&D예산이 아닌 기관운영비 증액을 통하여 지원되는 것이 타당함.

□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산업자원부 : 적극지원)

- 국가의 기간 산업인 반도체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급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연구 성과의 증대를 위해 기존 시설의 보강을 통해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기존 시설을 보강하여 공용 FAB으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공동 FAB으로서의 장비 경쟁력의 지속적인 강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요구 사업비는 시설을 위하여 40억, 장비를 위하여 60억 등 100억원으로 설정 하였는데, 이는 시설에 필요한 내용과 장비의 일반적인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함.
- 특기사항
 - 경북대는 고주파 및 센서 소자에 특화된 강점을 보여 왔고, 전북대는 화합물 반도체 소자의 연구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으므로, 양 대학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지원 형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학협동기술교육프라자(산업자원부 : 지원필요)

- 대학내에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산학협동 및 현장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연구 complex인 “산학 협동 기술교육 프라자를 설립하는 취지는 시의적절함.

○ “맞춤형 교육”은 우리나라 공학 교육이 지향해 나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산자부 등 관련부서가 범부처적으로 종합 기획하여
단계적으로 전국의 이공계 대학에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특기사항

- 산업기술대학교를 본 사업의 시범학교로 선정시 경쟁지원을 받아 공개심사로
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5. 연구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가.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기준

□ 심의 기본방향

- 신기술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능력 확충과 기관 특성에 따른 연구기능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지원
 - 기관평가와 연계한 예산의 차등 지원강화
 - 안정적 연구를 위한 기관 고유사업비 및 인건비 예산의 지원
 - 신규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노후 연구장비·시설의 개체 지원
-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술축적이 필요한 공공 연구개발기능에 대한 안정적 예산지원

□ 심의기준

- 기관 고유사업비 및 인건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
- 일반사업의 적정성 여부
- 일반사업 중 신규사업의 적정성 여부
- 시설예산 요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
- 기관별 연구기능의 전문화 지향성 여부
- 타 연구기관 연구사업과의 연계협의 검토 여부
- 타 연구기관 연구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 심의방법

-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의 반영정도, 사업의 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예산운용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심의결과등에 대한 조정사항 등 심의평가지침에 대해서 동일한 비중으로 심의하되,
 - 특히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예산운용의 적정성 부분을 중점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심의함을 기본방향으로 함

- 위원들의 관련분야 및 소속 등을 고려하여 45개 사업에 대한 중점검토위원을 지정하고, 정·부 중점검토위원의 협의를 통해 해당사업의 심의서 초안을 작성함
 - 작성된 심의서에 대하여 중점검토위원이 발표를 하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심의서에 대한 내용 보완
 - 사업별로 위원들의 투자우선순위 조사
 - 위원들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평균처리하여 최종 투자우선순위를 도출
 - 필요한 경우, 전체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
 - 우선순위 결정사항에 따른 심의의견 내용의 세부조정 실시

나. 심의결과 종합

□ 계속사업

사업수 \ 우선순위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	계
사업수	14	17	14	45
비율(%)	31.1(%)	37.8(%)	31.1(%)	100(%)

□ 종합의견

-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좀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함. 또한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함.
- 부처소속 출연연구기관 : 매우 진취적인 예산안과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치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하여 추진내용의 충실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강화되어야 함
- 기초기술연구기관 : 국가의 기초기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산업기술연구기관 : 산업계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직접 수행할수 있도록 과감하게 국가지원을 줄이거나 그 기능을 민영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관의 핵심고유사업은 계속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공공기술연구기관 : 국가의 공공기반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우선순위

○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	우선 순위
과학기술부	고등과학원	2,776	3,837	투자축소
	광주과학기술원	9,099	21,486	계속지원
	원자력안전기술원	3,997	6,809	계속지원
	한국과학기술원	10,478	32,399	계속지원
	한국과학재단	34,903	58,629	계속지원
	원자력병원	5,845	11,262	투자축소
	한국원자력연구소	15,317	21,206	투자확대
교육인적 자 원 부	한국학술진흥재단	4,752	6,623	계속지원
기상청	기상연구소	2,925	5,193	투자확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동물질병연구)	5,831	14,214	투자확대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시험	3,463	4,945	계속지원
	농업과학기술연구	19,613	23,836	계속지원
	농업기계화연구	7,921	6,156	투자축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6,022	7,791	계속지원
	영남농업시험	7,777	9,030	투자축소
	원예연구	17,018	19,499	투자확대
	작물시험	11,010	12,602	투자축소
	제주농업시험	6,519	7,342	투자축소
	축산기술연구	24,598	26,792	투자축소
	호남농업시험	6,875	8,085	투자축소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연구소	5,000	40,000	투자확대
산 림 청	임업연구원	14,628	20,086	투자확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	19,479	24,771	계속지원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982	360	계속지원
환 경 부	국립환경연구원	3,827	5,969	계속지원
국무조정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356	6,591	투자확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2,784	40,114	투자확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6,454	47,382	투자축소
	한국기계연구원	10,453	13,953	계속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130	25,045	투자축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289	39,776	투자확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661	18,211	계속지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117	9,017	투자축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148	16,948	투자축소
	한국전기연구원	7,243	12,343	투자확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321	6,321	계속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372	13,938	계속지원
국무조정실	한국천문연구원	5,993	11,197	계속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468	7,095	투자확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377	26,825	투자축소
	한국한의학연구원	1,672	2,162	투자축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385	13,072	투자확대
	한국해양연구원	16,347	32,389	투자확대
	한국화학연구원	11,454	12,040	투자확대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3,464	4,964	계속지원

다. 기관별 심의 결과

□ 고등과학원(과학기술부 : 투자축소)

- 세계적 수준으로 국내 기초 과학 연구분야를 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 추진 체계는 합리적이며 국내·외 과학자들간의 연구교류활동에 주력하는 점 등은 높이 평가됨. 그러나 창의력있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세계정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획기적인 전략이 요구됨
- 단기적 인력양성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연구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고등과학원내의 연구인력 저변확대 및 양성되는 인력의 활용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연구비로 전년대비 40% 증액 요청은 연구사업 추진내용에 비하여 과다함(20~30%로 조정요망)
- 특기사항
 - 연구개발능력의 증대를 위하여 30~40대 중심의 젊은 연구원/ 과학자를 핵심 교수급으로 유치하여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물·화학분야를 확대할 경우 신규연구인력 유치가 불가피하여 현재로서 경쟁력있는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함

□ 광주과학기술원(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첨단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외국과의 협동연구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잘 반영하여 첨단산업기술 기초연구·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광기술 연구센터 건설 및 운영사업을 기관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특화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균형적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할것이 요구됨
- 특기사항
 - 기본 연구 사업 실적: 교수 1인당 SCI 논문 5.2편으로 매우우수(연구결과의 실용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교수 인건비 현실화(현 : 연봉 4,900만원)를 위한 증액 요청은 인정됨.

- 광 기술 연구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예산(125억)이 과다하므로 재검토하기
요망함.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광기술연구센터와의 상호관계를 유지
하여 중복적인 부분에 대한 협조 체계 구축 요망됨.
- 지역특화산업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점차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
향으로의 추진이 요망됨

□ 원자력안전기술원(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원자력 안전관계의 심사 및 검사기준의
제정, 제도의 정비, 원자력 안전규제 및 교육훈련 등의 사업추진은 적절함.
-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연구, 안전규제요원 전문화 등의 사업내용은 원자력안전
관련 규제기관으로서 합당하다고 봄.
- 원자력안전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
신뢰성 구축방안의 마련, 평가기술의 고도화 및 체계적인 안전규제 기술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등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개선 및 발전사항으로는
 -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연구는 원자력연구소와 명확한
연구범위를 정하여 원자력안전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원자력 연구소의
실험 및 시험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긴밀한 협력체제가 요망됨.
 - 보다 확실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원자력전공자 뿐 아니라
관련된 타분야(예: 토목, 기계, 지질, 건축 등)의 인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이 요망됨.
- 기본사업비의 50억 증가는 타당하며, 일반사업기로 신청한 기관 고유사업인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사업규모와 예산의 검토가 필요함.
- 특기사항
 - 국가과학기술정책과 KINS의 임무에 부합하는 사업의 선정
 - 타기관과의 연구협력체제의 구축
 - 신규사업에 대한 실현가능

□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국가를 선도하는 고급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 저력배양을 위한 기술응용과 연구수행을 위하여 세계화·정보화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교육 및 연구사업을 국가와 기관의 중·장기 기술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음

○ 2003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과다(724억→1323억으로 ~ 200% 증액 요구)하므로, 자체내에서 우선투자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산정 및 집행을 재 기획할 것을 요망함.

○ 특기사항

- 교수인건비 현실화 요구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됨.
- 과학영재교육 program개발사업의 운영비가 과대하며, 이는 기존의 사이버 과학영재교육사업과 통합/연계수행이 바람직함.
- 첨단 연구 의료 센터 (신규사업) 설립 및 운영·예산(30억)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요망(원자력 병원의 신규사업인 첨단 의공학센터와의 중복투자가 우려됨)

□ 한국과학재단(과학기술부 : 계속지원)

○ 기관의 고유사업을 적합하다고 판단됨.

○ 일반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재 검토 요망

○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서 과학재단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영재양성은 수요공급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지역 확산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전문경력인사 활용”사업은 비 과학자뿐만 아니라, 과학자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수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면 함.

○ 특기사항

- 과학기술지식유통사업(0 --> 1,200) : KISTI 사업과의 중복성이 있음,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KISTI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예산 절감을 추진해야 함. 중복성이 있음.
- 영재양성은 수요공급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지역 확산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전문경력인사 활용”사업은 비 과학자뿐만 아니라, 과학자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수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면 함.

□ 원자력병원(과학기술부 : 투자축소)

○ 전반적으로 과다한 증액(200%) 요구(시설비 투자가 과다함)

- 신규사업(방사선 비상진료 정보화시스템 사업, 첨단 의공학 센터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임상으로의 전이연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연구자체에 대한 목적보다는 시설유지와 싸이클로트론실 운영 등의 임상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중되어있음 : 기관의 발전방향에 부합한지 검토 요망.
- 특기사항
 - 첨단 원자력 의공학 센터사업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첨단의료연구센터 사업과 중복 투자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 사업으로서의 시행은 재고 요망.
 - 방사선 비상진료 연구 센터 정보화 system 사업도 기존의 비상 진료 연구 센터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 운영 검토 요망.

□ 한국원자력연구소(과학기술부 : 투자확대)

-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종합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임무 달성을 위해 기관내부에서 사업간 역할분담 및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기관고유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성과가 국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추진전략 및 성과 활용계획 측면에서 우수함.
- 일체형 원자로와 같은 사업은 연구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관내부에서 기관고유사업과 시설비 사업이 국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상호 보완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관고유사업의 신규사업은 기관의 기능을 바탕으로 일류화·전문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 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고 판단됨
- 특기사항
 - 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련 모든 평가, 시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임.
 - 원자력연구소는 안전기술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두 자료나 정보를 지원하고 실험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공동협력체제로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인적자원부 : 계속지원)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임무인 학술연구 및 교류협력, 학술연구결과의 평가와 관리에 비추어 주요 사업 내용이 국제학술교류, 학술평가 및 학술연구지원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음.
- 사업추진목표와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내학술지 평가도 바람직한 사업임.
-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 대학교수의 해외방문 연구지원사업은 사업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의 발전.
 - 국내학술지 평가사업은 우수 학술지에 대한 보상 및 지원책 마련.
 - 국내외의 여건변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수립
- 특기사항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임무와 추진하는 사업의 부합성
 - 사업목표에 대한 사업추진체계의 연계성
 - 교류협력 및 학술활동의 평가 및 관리

□ 기상연구소(기상청 : 투자확대)

- 기관 고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획하였으며, 근본적인 예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사업과 이상기후의 조기감시를 위한 사업 및 시설의 확보를 통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재인 악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국제적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해당기관으로서의 기획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인정됨.
- MTSAT, EOS 위성자료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청사 증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시급한 사업임.
- 특기사항
 - 신규사업인 MTSAT, EOS 위성자료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은 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청사 증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시급한 사업임.

□ 수의과학검역원(동물질병연구)(농림부 : 투자확대)

- 전체적인 연구수행이 훌륭하였고, 기본 연구목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연구사업이 축산분야에서 직접 이용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기술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해외 연구소들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신종질병연구동의 신축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됨.
- 특기사항
 - 연구소의 기능의 중요성에 버금가는 연구시설의 확충 차원에서 신종질병 연구동의 신축은 필요함

□ 고령지농업시험(농촌진흥청 : 계속지원)

-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제안된 과제들로 감자품종육성부분에서 감자유전자 library구축 및 GMO감자 판별용 PCR 키트 제작 및 실용화 연구는 농업생명공학연구원과의 협력사항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8개 과제 수행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요청한 2,307백만원은 2002년의 1,915백만원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는 박사후과정 인력의 활용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음. 시설비는 신규 조성 집단화 포장 기반시설확보와 건물 개축 부분이며, 장비비로는 생명공학 및 기능성 물질 연구용 장비구입을 위한 것으로 제안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것인지 조정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함.
- 특기사항
 - 신규 조성 집단화 포장 기반시설확보와 건물 개축부분, 장비비로 생명공학 및 기능성 물질 연구용 장비구입을 위한 지원은 제안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조정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함.

□ 농업과학기술연구(농촌진흥청 : 계속지원)

- 시험연구비는 일정비율 (10-20%)로 상향조절 되었고, 사업을 위한 시설확보 차원의 예산증액이 상대적으로 높이 요구되었음.
- 환경미생물 자원종합관리동, 자동환경조절 벼재배사, 이천시험지의 시설보완, 바이러스격리온실 개축, 잠사곤충부 연구시설 통합 시설의 확보를 제안하였으며,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이 필요함.

○ 특기사항

- 사업의 구성이 연구기관의 고유한 업무에 부합하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준하는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장기적인 연구의 연차별 성과에 대한 뚜렷한 지표가 부족한 면이 있음.
- 시설의 확충은 근본적으로는 중요하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계화연구(농촌진흥청 : 투자축소)

○ 생산비절감 기계화 기술개발, 정밀농업 및 에너지절감 기술 개발 등의 사업 내용은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식량의 안정적 확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등 국가 정책 목표와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잘 반영하고 있음.

○ 특히 수출 확대 전략 차원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품질판정 자동화 기술개발 및 수확후 처리 기술개발도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계화 연구소는 동일 연구를 행하는 많은 산업체가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산업체와 차별화된 연구분야의 선정과 연구목표의 실용성이 대단히 중요한 기관임. 당연히 연구결과의 평가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대비한 생력화 등의 이유만으로는 농촌기계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정당화 시킬 수 없음.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정당성은 연구결과의 효율성과 실용성이 확보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임. 사업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작물중심의 일관된 기계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작물시험장, 원예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등의 작목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함

○ 농업기계 및 자동화기술개발은 농업기계이외 분야(전자, 통신, 제어기술 등)와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우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아웃소싱, 산업체와의 협동연구 등을 통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연구기획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기사항

- 농업기계화 연구소는 정부 유입의 농업기계화 연구소로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술, 산업체의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임

□ 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촌진흥청 : 계속지원)

○ 농업분야에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생명공학분야의 원천기술개발을 위하여 신설된 연구원으로 기존의 연구역량을 재배치하고 신규인원을 보강하여 사업의 좀 더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진행을 기획하였음. 기본적인 연구사업목표에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로 필요로 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작목연구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과제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빠른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업무의 분담으로 중복된 연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함. 신설 연구원으로서 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의 채용, 시설비와 장비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장비비의 경우 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확보가 바람직함.

○ 특기사항

- 신설연구원으로서 각 사업단위에서 다루는 농생명체의 대상을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잘 선정하여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실용화가 적시에 가능하도록 과제발굴에서부터 기획되어야 할 것임.
- 시설비의 지원은 타당하나 장비의 경우 공동이용의 가능성을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남농업시험(농촌진흥청 : 투자축소)

○ WTO 등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대비 생산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개발,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 연구 강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을 조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내외 환경의 변화 및 농가의 실질소득 증가 측면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함.

○ 특히 시설원예작물의 수출 확대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의 동향 및 외국의 기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목표 대비 사업내용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3단계에 걸친 사업선정 절차, 2단계 평가 등 추진체계 및 방법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과제의 개발, 선정, 수행, 평가과정 중에 농업분야 이외에도 경영, 유통, 마케팅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성 높은 성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곡과 관련해서는 작물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시설원예부분은 원예연구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관별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지방의 농업기관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기관으로서 보다 원천 기초분야의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특기사항
 - 농촌소득증대에 연구결과가 기여하는 정도가 큰 사업,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동남부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한 전문화 및 특성화에 대한 투자의 선별 및 지명이 필요함

□ 원예연구(농촌진흥청 : 투자확대)

- 원예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품종 개발 및 재배법 개선연구 강화를 위한 생명공학 응용연구분야에 투자 확대가 필요함
- 모든 분야에 대한 기존연구를 확대 지원하는 대신, 해외 경쟁력이 있는 과수 및 화훼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이 더욱 요구됨. 특히, 원예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수출품질 인증제도, 공동 브랜드제도 등을 도입하여 수출단가의 인상, 국산 원예작물에 대한 해외 인지도 증대 등의 사업을 시도할 것을 권장함
- 원예산물의 선도유지 저장, 가공 및 이용기술에 대한 연구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촌진흥청 고유업무로서 현재보다 대폭적인 예산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함
- 생명공학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및 수출유망 종목에 대한 집중적 연구개발로 농업의 기술산업화를 위한 선진 원예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요 개발이 시급함
-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원예연구원내에 있는 생명공학분야를 좀 더 집중 육성하거나 (연구원 질 개선, 숫자 증대, 예산증액) 혹은 농업생명공학연구원과의 유기적 연계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는 전략의 수립으로 중복과 대량생산을 피할수 있고 미래고부가가치 원예작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유망 산업으로 대두되는 화훼산업의 경우 기초 화훼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품종을 다양화하고 개발을 효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기사항

- 원예사업은 미래 농가소득에 증대에 기여가능성이 높은 유망사업으로서 우량 품종개발, 재배법의 개선연구 및 귀속되는 소득을 증가시킬수 있는 생산이 후단계(저장, 가공, 브랜드화)의 노력증대를 위해 투자확대가 필요함

□ 작물시험(농촌진흥청 : 투자축소)

- 작물시험장은 우리나라 작물등의 중심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큰 기관임. 작물시험장 전체 연구에 대한 투자 특히 기초투자부문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지금까지의 생산위주 연구에서 농민에게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수확후 관리(저장, 가공, 이용, 유통)에 관한 연구를 집중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작물시험장은 영남농업시험장 및 호남농업시험장과의 긴밀한 연계와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 중복투자 우려를 제거하여야 할 것임. 작물시험장은 자립을 이룬 주곡에 관한 연구보다는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용작물 등에 대한 연구가 권장됨
- 다양한 기상환경 여건을 고려한 인삼, 약용작물, 기호성 작물 등 농가소득자원 으로 개발이 가능한 작목에 투자 확대가 바람직함
-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없고, 소비량이 저조한 작물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새롭고 수요가 창출되는 고품질, 안전, 기능성 경제작물의 개발로 과 감한 전환이 필요함
- 특기사항
 - 작물시험장의 평가는 정부 기관으로서 여타 출연연대비 “투자축소”로 나타났다으나 이것은 강제배분에 의한 결과임
 - 작물시험장의 연구는 농진청내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간연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의증대가 필요함.

□ 제주농업시험(농촌진흥청 : 투자축소)

- 제주농업시험장은 국내 유일의 난지권 농업연구소로 난지 원예작물 및 청정 축산물 생산 기술개발, 친환경 생산체계 확립, 감귤연구 등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감귤 신품종 육성, 수출 전략채소 개발 및 국제기호성 채소 품질향상, 난지유망 자생식물의 새소득 자원화 및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 연구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높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의 전략성과 구체성이 부족함
- 연구완성 정도가 높은 기존분야 연구를 대신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주 농민의 실질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연구 분야로의 과감한 전환과 이에따른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예산의 배정)의 설정 및 사업실현을 위한 장단기적인 세부 전략의 보완이 필요함.
- 동시에 제주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 기존상품의 브랜드화, 출하시기의 조절 또는 제주 특산 농산품의 직접판매 대신 더 많은 가공과정을 거친 상품의 개발 등의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사업의 선정, 수행, 평가 등에 농업관련자 이외 분야의 전문가(전략, 유통, 마케팅 등)를 참여시켜 효율적이고 경제성 높은 성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난지권 원예작물 및 축산분야의 생명공학기술개발은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 공학연구원, 원예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초·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조기 실용화에 역점을 두어야함
- 난지 식물환경 연구분야도 농업과학기술원의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제주도 지역에 맞는 분야를 차별화하여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기사항
 - 제주농업 시험장은 국내유일의 난지성 식물관련 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 예산 지원은 예년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 축산기술연구(농촌진흥청 : 투자축소)

- 동물생명공학 연구는 순수 기초연구보다는 농가에 보급을 전제로한 응용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의 많은 연구가 이론 위주의 연구라는 지적이있음. 축산기술 연구소는 철저히 실용위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환경오염의 방지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또한 이 문제 해결하는 방안도 현실 적용이 용이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현장적용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축산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연구가 축산기술연구소의 주요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축산기술연구소는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고급화, 수출 지원 및 기능성 축산물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요망됨
- 종축개량부는 경제성이 있는 축종을 대상으로 『연구영역을 축소』 하고, 잉여 인력과 자원을 생명공학 및 기능성 축산물 생산연구에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음
- 특기사항
 - 농진청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출연연 사업등에 비해 “투자축소”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강제배분에 의한 것임
 - 축산기술연구소는 국내유일의 축산기술연구소로서 WTO로 인한 축산품질 고급화를 위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
 -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임

□ 호남농업시험(농촌진흥청 : 투자축소)

- 전반적인 환경변화와 중장기 국가연구개발 계획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체계에서 농정을 지원하고 농가소득과 관련된 사업이 추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연구과제 선정전에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분야의 선정, 추진시 농업이외에 타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체계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
-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새만금 간척 관련 연구와 서남부지역에 적합한 경제작물 개발에 관련된 사업은 시의적절함
- 그러나 조분평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식량작물에 관련된 연구도 중요하나 좀더 농가의 소득을 염두에 둔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특기사항
 - 호남농업시험장은 국가연구기반으로서 벼, 콩, 참깨 등과 같은 작물연구, 친환경 농업연구, 잡초관리연구 등의 주요 연구기관임
 - 일반출연 연구기관대비 강제 배분원칙에 의해 낮은 평가가 나온것임
 - 식량자급 및 WTO 이후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의 개선이 요구 됨.

□ 국립암센터연구소(보건복지부 : 투자확대)

-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국가적 Infra의 구축은 암의 예방,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국민보건 향상에 필수적인 사항이나, 센터는 인프라 구축과 자체 연구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외부연구에 대한 관리는 연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민간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암 연구수행이 어려운 암등록 통계정보, 조기진단 등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확대가 요망됨

□ 임업연구원(산림청 : 투자확대)

- 연구사업의 중요도, 산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노후장비와 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면서 산림분야의 새로운 가치와 수요에 부응하고자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나타남.
- 확보된 우수한 연구인력을 효과적이고 신축적으로 관리하여 BT, IT, ET 등 첨단연구분야의 연구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시설과 장비를 확보할 계획은 적절함.
- 고급 연구인력의 활용, 첨단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과제 당 연구비 증가를 요청한 것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임업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대형과제의 추진, 황사현상 등 타 부처 및 외국과의 공동연구의 활성화, 산림유전자원의 확보 등 국제화에 대비한 자료 축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사업 규모의 확대가 요청됨.
- 특기사항
 - 임업기술의 투자효과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그 효과도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임.
 - 21세기의 주요 문제는 심각한 환경오염인데 이러한 환경오염의 해결기술중에서 중요한 요소인 임업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은 시급한 상태이므로 임업 기술개발을 위한 '확대투자'가 요청됨.

□ 국립수산진흥원(해양수산부 : 계속지원)

-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인, 소비자, 수산관련인, 국민, 정부 등의 다양하고 많은 수요자를 갖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이들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인정됨.

- 그러나 사업의 선정, 추진방법 및 예산규모 등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 또한 어업자원 관리·유지 및 해양생명공학연구의 본격 착수에 부합하는 사업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존 증·양식 기술개발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고부가가치의 첨단 수산기술 개발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해양생명공학분야의 경우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그 발전가능성과 성장 잠재력, 시장규모 등을 볼 때 초기투자 단계에서 대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향후 해양기술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속적인 계속 투자가 요청됨.

□ 국립방재연구소(행정자치부 : 계속지원)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법 개발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특히, 연구인력의 확충과 첨단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기획 등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전문화를 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립환경연구원(환경부 : 계속지원)

- 환경신기술창업보육사업은 연구원의 사업성격으로는 부적합함.
- 신규과제인 유기성폐기물 종합관리기술 구축사업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하나 우선 농업과학기술연구원과의 연계 검토 요망하며, 자체 플랜트의 설치가 필요한지 혹은 공동연구로 타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환경독성실험동의 신축 및 소음진동실험동의 첨단측정분석시스템의 구축은 현 환경문제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지원이 필요함.
- 환경분야의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한된 연구인력과 산재한 업무분야들을 수행하면서도 뚜렷한 연구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사업의 개발과 수행의 역점을 좀 더 집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기사항
 - 환경신기술창업보육사업은 연구원사업의 성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유기성폐기물종합관리기술 구축사업은 꼭 시행되어야하는 사업이나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설비의 확보에 앞서 발생량과 처리 후 생산물의 수요량 조사 등 기본조사와 현황파악 등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확대)

- 제안된 사업은 기본사업 발전계획(2002 ~ 2007)에 준하여 선정된 기반구축 및 지원 사업이라고 판단됨.
- 계획사업은 기관의 고유업무인 건설기술정책연구개발분야, 건설기술품질연구개발분야, 건설기술 지식정보화 분야에 부합되어 제안되었다고 판단됨.
- 기본사업 발전계획(2002 ~ 2007)에 준하여 수립되고, 제안된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milestone과 예상되는 결과물, 이에 대한 상용화 등의 전략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 시설비 중에서 “화재실험연구동 건설”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신규사업중에서 "한국형 다기능 하천실험사업"은 수자원공사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을 추천함.
- 제안된 사업은 기관 임무에 적절하고 부합된다고 판단됨.
- 특기사항
 - 계획사업은 기관의 고유업무인 건설기술정책연구개발분야, 건설기술품질연구개발분야, 건설기술 지식정보화 분야에 부합되어 제안되었다고 판단됨.
 - 시설비 중에서 “화재실험연구동 건설”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신규사업중에서 "한국형 다기능 하천실험사업"은 수자원공사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을 추천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확대)

- 제한된 재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기관설립의 본 취지와 미션을 우선적으로 달성하도록 기본 연구사업의 연구참여 인건비 비율을 상향 조정지원하고, 일단 성공된 과제는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연구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외부 평가 및 추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층 검토 후 주도적으로 개선책을 모색 적용해야 할 것임.
- 특기사항
 - 기관고유 인건비 참여율을 높여 기관의 연구영양을 고유사업에 집중하여 연구의 생산성을 재고토록 할 것.

- KIST 유럽의 활동 확대와 원천기술 개발 활동의 확대는 본연의 업무를 내실화하는 것에 비해 투자순위가 훨씬 낮아져야 할 것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축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정보를 국내외적으로 유지관리 및 유통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2001년도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통합한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임.
- 2003년도에 신청사업은 기본사업에 대한 기능보완과 부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능보완을 위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건, 그리고 기본사업의 부가기능으로 계속 2건, 신규 2건임.
- 계속사업은 본 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신규사업으로 제안한 사업 중에서
 - “해외심층정보자료확충사업”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가정보원, 한국과학재단 등 관련 부서와 진행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출연(연)의 연구성과 공동 활용 체제 구축”은 이미 국가과학기술 산하 기관에서 고유하게 취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기관별 공개 가능한 정보와 공개 불가능한 정보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고 경력 과학자 정보활용사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 시에 많은 외부의견들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특기사항
 - 한국과학재단에서 현재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전문 경력인사 초빙 활용지원사업“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2003년부터 신규사업을 제안한 “경력과학자 정보활용사업“과 잘 연계하여 추진함으로 효율적인 국가과학기술 인력을 지원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국기계연구원(국무조정실 : 계속지원)

- 기본 사업 중 신규사업 비율이 높음(나노지향 미세기계사업, 제로 에미션 환경기계사업, 원천 구조재료 사업/ 5개 중 3개). 사업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음으로써, 신규사업이 많아짐.

- 시설비 비율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관고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함.
- 연구원의 연구원의 질 및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사업추진 성공성은 높음.
- 자기 부상열차 사업은 국가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될 때까지,
- 특기사항
 - 기계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본 연구원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고유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에 본 예산을 집중함.
 - 기계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을 것을 권장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축소)

-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연구개발 속도를 제고하겠다는 본원의 지원업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할 필요 있음.
- 신규확충하는 기기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요자와 국가차원의 광범위한 수요 조사와 향후 방향에 대한 예측연구가 요망됨.
- 심도있는 전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대형기기의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이 기기 개발/개선과 함께 활용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됨.
- 상대적으로 널리 보급되어있는 범용 기기에 대한 지원은 정리 중단하고, 기존의 지원인력은 타 기기의 지원을 위해 적응 교육 후 활용함이 합리적일 것임.
- 예산의 과도한 확대를 전제로 하는 사업편성은 적절하지 않음.
- 특기사항
 -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연구개발 속도를 제고하겠다는 본원의 지원업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할 필요 있음.
 - 신규확충하는 기기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요자와 국가차원의 광범위한 수요 조사와 향후 방향에 대한 예측연구가 요망됨.
 - 심도있는 전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대형기기의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이 기기 개발/개선과 함께 활용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됨.

- 상대적으로 널리 보급되어있는 범용 기기에 대한 지원은 정리 중단하고, 기존의 지원인력은 타 기기의 지원을 위해 적응 교육 후 활용함이 합리적일 것임.
- 예산의 과도한 확대를 전제로 하는 사업편성은 적절하지 않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확대)

- 현재의 사업 경쟁수주체제로는 BT기술 확보에 있어서 국가적인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Post-Genome infra 사업의 기획의도는 현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전체 및 단백질체 관련 생명공학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해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구축하고, 그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사업계획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함이 요망됨.
- 기본사업비가 연구내용과 직접비대비 인건비 과소하므로 증액, 내실화 필요
- 특기사항
 - BT는 국가 전략연구분야이고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분야의 전문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생명공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를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고유 역할을 정립 top-down형식이 필요하며, 기관고유사업으로 집중 수행하도록 기관고유사업을 관리 강화해야 하고, 이에맞는 기관고유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무조정실 : 계속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가 국가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및 지원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사업임
- 아울러 기술실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 기술혁신 기능간 연계적으로 추진하여 유효성이 큼을 감안하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안산테크노파크 Pilot Plant건축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기능을 기업집적지로 이전하는 사업이며 산학연관이 연계추진 하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실효성이 인정됨

- 보유한 연구자원과 능력을 감안할 경우 요구된 예산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증가추세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수요를 감안할 경우 지속적인 확대지원이 요구됨(현재의 예산규모로는 중소기업 수요의 20~30% 수준만 해소가능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기본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정부가 각 37%, 22%를 지원하고 있어, 좀더 충실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비율 확대가 요망됨
- 2003년도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유효성이 높은 점을 감안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패션 벤처기업 육성사업”과 “열처리·표면처리 기술지원사업”은 지원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동 연구분야를 담당하는 유일한 공공연구기관임,
 - “안산테크노파크 Pilot Plant건축공사”는 산학연관간에 협력하여 연계추진하고 있어 실현가능성과 시급성이 높으며, 성공적으로 지역기술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특기사항
 - “이전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2003년 하반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센터 완공시 현재 주안에 있는 연구자원(인력, 장비 등)의 송도 이전이 불가피한 바, 2003년 1회에 한하여 소요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주)SK와 5년간('97.9~'02.8) 체결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한국식품개발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축소)

-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세부실천사항이 더욱 구체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사업중 “우리쌀 품질차별화 기술개발”과 “천연향을 이용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의 2개 신규사업은 기업주도 연구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기관고유 임무의 잘 부합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확산을 비롯한 사업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기업연구와 차별화 하여 기관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함.

○ 특기사항

-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식품산업육성 전략의 중장기 실천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축소)

○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중장기 발전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사업이 선정·수행되고 있음.

○ 사업선정과 추진체계는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신개념 미래 에너지자원개발은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관련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외기술동향을 철저히 monitoring하여 반영하여야 함.

○ 기본사업의 확충은 매우 필요하나 일반사업의 급격한 팽창('03년도)은 우려가 되므로 조정이 필요함.

○ 정량적 연구실적의 배가에 노력이 필요함

○ 특기사항

- 기본사업비, 특기 기관고유사업비 증가('02년도 29.49억원, '03년도 71.51억원)는 계속사업비의 내실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일반사업의 풍력발전시스템 성능평가 기지화사업은 타당성과 경제성을 보다 신중히 하여 단계적으로 접근요망
- 종합시험동 건설은 기존의 분산된 가건물을 한데모아 연구의 효과증진에 필요한 시설사업임.

□ 한국전기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확대)

○ 기본 사업 및 일반 사업 및 시설 사업이 전기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이라는 연구원의 목표에 적합하며, 또한 시험사업 및 이에 관련하는 시설사업 역시 본 연구원 기능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연구원의 연구원의 질 및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사업추진 성공성은 높음. 단 기관고유임무가 아닌 사업으로 연구원의 자원이 분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시험 평가 및 전식대책 사업 등은 수요조사를 실시한 수, 평가 혹은 적용 횟수 등에 대한 목표 및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공동연구비 참여등이 추천함.

○ 특기사항

- 본 예산은 기관의 고유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한 연구 및 시설비 사업으로 제한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 제안이 전력기술의 부가가치 향상, 그리고 전력관련 시험 지원에 합당하다고 평가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무조정실 : 계속지원)

○ 기본 사업 중 적합하지 않은 일부(PDP aligner사업 및 ASIC 파운드리 사업)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일반 사업 및 시설 사업이 본 연구원 기능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연구원의 연구원의 질 및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사업추진 성공성은 높음.

○ 안테나 시설 구축 사업, 광부품 시설 사업등은 수요조사를 실시한 수, 사용 횟수 등에 대한 목표 및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예산에서는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관의 기본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한정, 집중하는 것을 추천함.

○ 특기사항

- 본 예산은 본 연구원의 고유업무 방향인 정보통신 분야의 원천기술, 대형 과제 비중확대, 그리고 개발이전을 강화하기 위한 고유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연구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함.
- 전체적으로 이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나, 일부 본 예산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있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국무조정실 : 계속지원)

○ 국가자원확보 및 개발, 지질자원 정보 system 구축, 지질재해 방지기술 등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에 대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수행하고 있음.

○ 기관고유사업은 계속사업이지만 연구내용의 증가로 인해 타당성이 있으며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시설보수, 장비교체 및 실험동 건설과 폐수처리장 대보수의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기반시설 구축으로 필요함.

○ 특기사항

- 박물관 운영은 기관 홍보에는 도움이 되나 기관고유업무로 보다는 타영역과 함께 종합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의 사업전환의 모색이 필요하며 재원도 과학문화재단의 자금지원이 사업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 일반사업의 신규과제인 심부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은 에너지관련 연구원과 경제적 타당성(에너지원으로서의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기획부터 단계별로 추진이 요망됨.
- 기본사업비(특히 기관고유 사업비)의 증액은 매우 필요한 실정임.

□ 한국천문연구원(국무조정실 : 계속지원)

- 제한된 재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기관설립의 본 취지와 미션을 우선적으로 달성하도록 기본 연구사업을 집중하여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
- 국가적 요구가 없는 한 세계최고수준이 사업달성 목표이어서는 안되고, 국가적 요구에 맞추어 적절한 예산규모로 운용하여야 할 것임.
- 국내의 기초과학연구활동과 연계추진필요
- 외부 평가 및 추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층 검토 후 주도적으로 개선책을 모색 적용해야 할 것임.
- 특기사항
 - 확보목표기술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소요비용은 더욱더 큰 것으로 보여 사업재기획 필요
 - 세계최고수준이 사업달성 목표이어서는 안되고, 국가적 요구에 맞추어 적절한 예산규모로 운용하여야 할 것임.
 - 국내유관과학기술인력의 참여활용확대필요
 - 외부 평가 및 추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층 검토 후 주도적으로 개선책을 모색 적용해야 할 것임.
 - 국내의 인적 및 기술적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동원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과 협력하는 것이 타당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확대)

-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운영의 민영화, 남북철도 복원 및 대륙과의 연계사업의 대두 연구원의 지향목표인 2010년도에 세계수준규모의 철도연구 전문기관으로의 도약 등 국내외환경에 부응하여 철도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음.
- 전년도 연구예산이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중 최하위에 속해있어 단계적으로 연구비(특히 기본사업비)를 증액하여 국내유일의 철도전문연구원으로서 역할정립이 이루어질수 있어야 하며 계획중인 분석동 건설은 연구동을 겸하는 기본 시설로 연구환경 구축에 필요한 시설임.

○ 특기사항

- 열악한 기본사업비의 개선('02년도 50.21억원, '03년도 74,23억원), 지속적인 증가 요망됨.
- 철도안전 system 분석동 건설은 연구동 겸용 건물로 기관 연구환경 개선에 필요함.

□ 한국표준과학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축소)

○ 사업의 타당성

- 국가표준 연구 및 보급, 정밀측정 및 평가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연구사업은 그 성격상 국가고유의 영역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그리고 시설사업은 그 타당성한 것으로 인정됨.
- 그러나 신규사업의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사업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 신규사업의 경우 항목별 현실적인 예산책정이 필요하며, '산업측정 신뢰도 제고'사업의 경우 사업규모에 비해 다소 과다한 예산으로 파악됨.

□ 한국한의학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축소)

○ 서양의학, 약학등 관련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과확산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실현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따른 세부추진계획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함

○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구사업의 질적수준제고와 함께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기관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과 체계에 대한 정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신규사업중 microarray를 이용한 약재독성 및 약리연구사업은 타기관(식약청 독성연구소)사업을 고려하여 추진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함.

○ 특기사항

- 조사·분석·평가 결과가 계속적으로 하위등급에 머물고 있으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확대)

- 사업투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향후 연구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시급함.
- 예산의 배분에 있어 시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전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계획과 동 연구원의 계획이 부합되며 계획 수립에 있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고 판단 됨.
- 현재 국가 항공 우주기술이 선진국의 기술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을 기초로 투자확대되어야 함.
- 사업성공 가능성에 비추어 인력증원을 하여야 함
- 위성 발사장 건설 및 우주 정거장 건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함.

□ 한국해양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확대)

- 한국해양연구원은 기본·특수 연구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이 기관본연의 임무 및 기능에 충실함
- 기본사업비는 2002년 142억원 대비 37.3% 증액의 요구는 타당함
- 일반사업비는 2002년 120억원 대비 220%인 264억원을 신청하여 과제별 검토가 요구됨. 가능한한 공공기술 연구기관의 사업비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기를 바람. 따라서 추후 일반사업비의 중요사업들은 기본 사업비의 예산으로 배정바람
- 해양 환경 시뮬레이션 센터 설치·운영과 해양 안전 방재 종합 연구시설은 미래지향적으로 투자가 바람직함. 신규과제인 Bio-Marin Tech 프로그램, 차세대 고속 특수선 기반구축사업등(ADD 제2본부의 업무중복 가능성 여부)은 다른 연계 사업들과 비교 검토가 필요함
- 대덕분원 연구동 안전 보강은 필수적임. 그러나 동해연구기지 설치 등은 본원의 중장기 계획 운영방안에 따라 각 연구소의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중과 선택의 결정이 필요함

□ 한국화학연구원(국무조정실 : 투자확대)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기관으로서 기업계 참여등의 요구로 상대적으로 기관 고유사업예산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임.
- 연구분야는 규모가 큰 석유화학, 농약, 의약, 고분자, 무기재료, 염료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T, BT, NT등에 연계되는 관련기술분야에도 중요한 요소이어서 연구수요가 매우 큼.
- 모방연구, 개선연구는 업계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화학연구원은 원천기술을 담당하면서 업계를 선도해야 함.
- 원천기술이 성공적으로 확보된 과제는 이의 실용화를 위해 기업참여가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함.
- 차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42.7%로서 예산신청은 타당성이 높음.
- 특기사항
 - 농약, 의약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여 있으며 이러한 수준으로 여타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연구를 지속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6T 기술개발에의 적극 참여와 아울러 기존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관고유 연구비를 ‘확대지원’이 필요함.

□ 한국화학연구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국무조정실 : 계속지원)

- 국가 화학 및 생물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기반시험기술의 확보와 국가적 안정성 평가의 Infra 확보전략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규시설의 유휴화 방지 및 조기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 및 요구예산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은 국가 공공의 핵심 Infra에 속하는 사업임으로 일반적인 연구기관 평가와 같이 논문 또는 매출실적으로 판단하여서는 곤란하며 국제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IV. 정책건의

1. 연구개발전문위원회 안건중 조분평/사전조정 종합 정책건의

□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사전 기획의 효율화

-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과 차년도 중점 투자방향 등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따라 부처별 연구사업 기획 및 사업화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기술지도를 바탕으로 한정된 과학기술 자원이 배분·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외 내실화

- 연구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사전조정을 차별화하고 추진과정의 효율성을 제고
 - 평가 및 사전조정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
- 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는 각 부처 연구사업 기획 및 추진시 반드시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외 대한 지원기능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시적 평가 및 사전조정 추진을 위한 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대
- 효과적인 종합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R&D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연구사업 성과분석 등 각종 분석기능을 강화

2. 사전조정 심의결과중 심의위원회별

<사전조정 제도개선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지원 조직에 대한 인력·예산의 확대 및 종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R&D 동향분석, 사업성과분석 등 사전분석 강화
- 사전조정의 심의항목을 특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
 - 우선순위 항목 등 심의기준 항목의 조정
- 각 심의항목별 양적 질적 자료제출 강화 및 충실화와 각 부처별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과 중점 연구방향에 대한 자료요구를 강화
 - 심의자료 제출 시 예산요구의 특성이 나타난 Executive Summary 제시

-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매우 중요하나 연구기획 내용이 부실하여 문제가 될 경우 재평가하는 제도적 장치 및 신규과제 심의시 기획보고서 내용을 심의항목의 하나로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강제배분 방식에 의한 우선순위 설정은 사업의 특성, 중요성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제도개선 사항>

- 기술 융합시대에 대응하여 다부처 공동참여방식의 연구사업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이런 사업에 투자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필요
- 매년 하반기에 각 부처 연구개발책임자와 심의조정위원, 전문가들이 연구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열어 사업기획능력을 높이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

<심의위원회 해당 건의사항>

■ 원천·공공·복지기술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 원천 및 공공기술사업은 대부분 중장기 사업이므로, 3년마다 단계 평가를 철저히 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 및 복지기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재검토를 통해 기관고유사업의 특성이 강한 R&D 사업을 기관고유사업화 하는 사업정비가 필요

■ 연구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 사업비 투자확대에 비례하여 인건비 예산도 연계하여 확대가 요청되며, 예산 허용한도 내에서 연구인건비를 기관의 특성에 따라 70~80%까지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
- 기관 고유사업에서 확보된 산업선도기술과 원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로 기술을 개발한 기관에서 현장 생산/활용기술로 완성될 때까지 주관토록 지원
- 산업기술 연구회의 산하 출연 연구기관들의 기관 고유사업을 6T 기술과 더불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선도를 최우선 목표로 기획·추진하도록 강화
 - 연구생산성 제고와 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과감한 확대투자가 요청됨
- [투자축소]의 평가를 받은 연구기관도 열악한 연구환경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도록 요청

[별첨1]

부처별 우선순위 설정결과

신규/ 계속	부처	사업명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액	우선순위
계속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혁신	7,000	25,000	투자확대
계속	건설교통부	경량전철기술개발	9,500	10,000	계속지원
계속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기술개발연구	5,000	9,000	계속지원
계속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표준화연구	4,000	7,400	투자축소
계속	건설교통부	산학연공동연구	15,080	105,000	투자확대
계속	건설교통부	지능형교통시스템	22,739	48,195	투자축소
신규	건설교통부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	-	22,000	적극지원필요
건설교통부 합계			63,319	226,595	
계속	과학기술부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68,000	218,000	투자확대
계속	과학기술부	고등과학원	2,776	3,837	투자축소
계속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기초과학연구지원)	4,800	29,257	투자확대
계속	과학기술부	광주과학기술원	9,099	21,486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사업(우수연구 및 연구리더육성)	106,860	135,000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국제공동연구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	11,144	23,000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국제화기반조성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	14,735	17,250	투자확대
계속	과학기술부	국책연구개발사업(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58,250	140,810	투자확대
계속	과학기술부	목적기초연구사업(기초과학연구지원)	98,383	165,385	투자확대
계속	과학기술부	민군검용기술개발(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17,460	23,000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기초과학연구지원)	17,498	20,000	투자확대
계속	과학기술부	연구기반구축사업	43,400	61,000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연구성과지원사업	10,050	15,800	투자축소
계속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육성(기초과학연구지원)	65,190	83,000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우주기술훈련사업	104,970	182,500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기금)	6,100	6,100	투자축소
계속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3,997	6,809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기금포함)	153,200	165,421	투자확대
계속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기관확충사업(기금)	18,500	19,000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	1,000	1,300	투자축소
계속	과학기술부	지역간기술혁신협력사업(2P)	-	5,000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기초과학연구지원)	25,480	36,650	투자확대
계속	과학기술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운영사업 (기초과학연구지원)	20,180	23,629	투자축소
계속	과학기술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우수연구 및 연구리더육성)	32,200	44,100	투자확대
계속	과학기술부	특성화장려사업(기초과학연구지원)	8,039	10,000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원	10,478	32,399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34,903	58,629	계속지원
계속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병원	5,845	11,262	투자축소
계속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연구소	15,317	21,206	투자확대
신규	과학기술부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구축사업(기초과학연구지원)	-	2,950	지원필요
신규	과학기술부	국가핵심연구센터 육성(기초과학연구지원)	-	15,000	적극지원필요
신규	과학기술부	기초의학육성(기초과학연구지원)	-	6,000	재검토요망
신규	과학기술부	방사선기술(RT)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	-	10,000	지원필요
신규	과학기술부	선도기초과학연구실(기초과학연구지원)	-	6,000	지원필요
과학기술부 합계			1,067,854	1,620,780	

신규/ 계속	부처	사업명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액	우선순위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연구과제지원(학술연구구성)	43,700	53,200	계속지원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기초학문지원(학술연구구성)	132,300	155,300	투자확대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육성	138,222	200,000	계속지원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원의 연구력강화(학술연구구성)	11,000	11,000	투자축소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촉진지원	2,000	6,500	투자축소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우수연구자지원(학술연구구성)	33,000	34,500	계속지원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우수학술단체지원(학술연구구성)	6,000	6,000	투자축소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	2,400	3,000	계속지원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성과제지원(학술연구구성)	4,000	10,000	투자확대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4,752	6,623	계속지원
신규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전략분야 고급 R&D인력양성 지원	-	15,000	재검토요망
교육인적자원부 합계			377,374	501,123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356	6,591	투자확대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2,784	40,114	투자확대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6,454	47,382	투자축소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기계연구원	10,453	13,953	계속지원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130	25,045	투자축소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289	39,776	투자확대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661	18,211	계속지원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117	9,017	투자축소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148	16,948	투자축소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전기연구원	7,243	12,343	투자확대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321	6,321	계속지원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372	13,938	계속지원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천문연구원	5,993	11,197	계속지원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468	7,095	투자확대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377	26,825	투자축소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한의학연구원	1,672	2,162	투자축소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385	13,072	투자확대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해양연구원	16,347	32,389	투자확대
계속	국무조정실	한국화학연구원	11,454	12,040	투자확대
계속	국무조정실	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3,464	4,964	계속지원
국무조정실 합계			219,488	359,383	
계속	국방부	기초연구/특화센터	5,307	6,247	계속지원
계속	국방부	민군겸용기술사업	8,200	8,600	계속지원
국방부 합계			13,507	14,847	
계속	기상청	기상연구소	2,925	5,193	투자확대
계속	기상청	기상지진기술개발	3,830	10,500	투자확대
계속	기상청	기후변화감시및장기예측시스템구축	1,020	1,084	투자축소
신규	기상청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	-	2,588	지원필요
신규	기상청	차세대 산업응용기상기술개발	-	400	재검토요망
기상청 합계			7,775	19,765	

신규/ 계속	부처	사업명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액	우선순위
계속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41,228	47,121	투자확대
계속	농림부	농촌생산기반연구	2,338	2,560	투자축소
계속	농림부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	2,801	3,132	계속지원
계속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동물질병연구)	5,831	14,214	투자확대
농림부 합계			52,198	67,027	
계속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시험	3,463	4,945	계속지원
계속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	19,613	23,836	계속지원
계속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	7,921	6,156	투자축소
계속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공동연구	23,024	33,413	투자확대
계속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12,342	35,381	투자확대
계속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6,022	7,791	계속지원
계속	농촌진흥청	병해충잡초발생 감시체계 구축	1,182	1,500	투자축소
계속	농촌진흥청	영남농업시험	7,777	9,030	투자축소
계속	농촌진흥청	원예연구	17,018	19,499	투자확대
계속	농촌진흥청	작물시험	11,010	12,602	투자축소
계속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	6,519	7,342	투자축소
계속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	24,598	26,792	투자축소
계속	농촌진흥청	호남농업시험	6,875	8,085	투자축소
농촌진흥청 합계			147,364	196,372	
계속	문화관광부	게임기술 개발사업	800	1,200	투자축소
문화관광부 합계			800	1,200	
계속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연구소	5,000	40,000	투자확대
계속	보건복지부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보건산업진흥)	10,600	30,000	계속지원
계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보건산업진흥)	39,000	51,500	투자확대
계속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지원(보건산업진흥)	16,000	40,000	계속지원
계속	보건복지부	유전체실용화사업	4,900	8,900	투자확대
계속	보건복지부	전염병실험장비현대화	573	2,611	계속지원
계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연구	3,177	9,500	투자축소
계속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개발	2,500	25,000	투자축소
계속	보건복지부	휴먼의료공학기술개발(보건산업진흥)	14,000	20,800	투자축소
신규	보건복지부	나노보건기술개발(보건산업진흥)	-	15,000	지원필요
신규	보건복지부	미래보건의료전략기술개발(보건산업진흥)	-	10,000	적극지원필요
신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바이오산업 육성	-	8,100	재검토요망
보건복지부 합계			95,750	261,411	
계속	산림청	산림유전자원연구	1,009	1,991	계속지원
계속	산림청	임업연구원	14,628	20,086	투자확대
계속	산림청	특정연구개발출연	100	500	투자축소
산림청 합계			15,737	22,577	
계속	산업자원부	공동핵심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48,000	66,000	투자확대
계속	산업자원부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3,213	6,500	투자확대
계속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8,300	10,00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	24,647	45,421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디자인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9,200	14,00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디자인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13,000	19,000	계속지원

신규/ 계속	부처	사업명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액	우선순위
계속	산업자원부	민군겸용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9,200	13,00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	300	5,000	투자축소
계속	산업자원부	부품소재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36,000	65,000	투자확대
계속	산업자원부	부품소재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129,080	170,000	투자확대
계속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75,200	130,00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양성(산업기술기반조성)	12,600	100,000	투자확대
계속	산업자원부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17,000	18,500	투자축소
계속	산업자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	20,000	25,000	투자확대
계속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너지기술개발)	1,020	15,420	투자축소
계속	산업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기술개발(에너지기술개발)	29,802	51,26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기금)	78,700	116,10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29,499	40,000	투자축소
계속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6,350	12,000	투자축소
계속	산업자원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84,300	130,000	투자확대
계속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산업기술기반조성)	28,000	35,00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지역진흥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조성)	42,500	30,100	투자축소
계속	산업자원부	지역특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48,200	55,600	투자축소
계속	산업자원부	차세대신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45,700	75,00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청정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35,000	50,00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조성(산업기술기반조성)	30,000	60,00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표준화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8,000	10,500	계속지원
계속	산업자원부	항공우주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26,000	27,000	투자확대
계속	산업자원부	핵심기반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28,700	85,000	계속지원
신규	산업자원부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조성)	-	10,000	적극지원필요
신규	산업자원부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	-	10,000	적극지원필요
신규	산업자원부	산학협동기술교육프라자(산업기술기반조성)	-	9,000	지원필요
신규	산업자원부	헬기기술자립화사업	-	28,000	지원필요
산업자원부 합계			927,511	1,537,401	
계속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 안전성관리	20,000	73,450	계속지원
신규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소재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사업	-	18,000	재검토요망
식품의약품안전청 합계			20,000	91,450	
계속	정보통신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기금)	304,200	302,500	계속지원
계속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	23,600	28,300	계속지원
계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기금)	40,000	29,200	계속지원
계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기금)	102,530	71,200	투자축소
계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기금)	10,000	9,800	투자축소
계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기금)	171,213	156,500	투자축소
계속	정보통신부	표준화사업(기금)	33,000	29,150	계속지원
정보통신부 합계			684,543	626,650	
계속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38,102	46,350	계속지원
계속	중소기업청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14,185	30,500	투자축소
계속	중소기업청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5,035	25,110	투자축소
계속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6,580	20,750	투자축소

신규/ 계속	부처	사업명	2002년 예산	2003년 요구액	우선순위
계속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99,312	140,000	투자확대
신규	중소기업청	기업협동형전략기술개발지원	-	11,000	적극지원필요
신규	중소기업청	조달시장연계신제품연구개발	-	9,000	지원필요
신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연구회지원	-	5,100	재검토요망
중소기업청 합계			163,214	287,810	
계속	철도청	철도기술연구개발	6,000	21,060	계속지원
철도청 합계			6,000	21,060	
계속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	19,479	24,771	계속지원
계속	해양수산부	첨단항만기술개발	3,208	5,650	계속지원
계속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27,250	57,112	투자확대
계속	해양수산부	특정수산기술개발	5,351	6,560	계속지원
계속	해양수산부	해상안전연구개발	750	2,550	투자축소
계속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5,803	10,195	계속지원
해양수산부 합계			61,841	106,838	
계속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982	382	계속지원
행정자치부 합계			982	382	
계속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3,827	5,969	계속지원
계속	환경부	지역환경기술센터 지정 운영	3,905	8,018	투자확대
계속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70,000	120,000	투자확대
환경부 합계			77,732	133,987	
전체 합계			4,002,989	6,096,658	

[별첨2]

사전조정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 심의조정위원회 명단(9인)

구 분	성 명	현 직 책	전 공	비 고
위 원 장 (1)	박 원 훈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화 학	국과위 민간위원
부위원장 (1)	이 희 국	LG전자기술원 원장	전기공학	국과위 운영위원
위 원 (6)	이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수 학	원천/공공/복지위원장
	차 창 룡	서울대학교 교수	미 생물학	산업기술연구개발위원장
	손 욱	삼성종합기술원장	기계공학	연구기반조성사업위원장
	김 학 수	서강대학교 교수	언 론 학	연구기관지원사업위원장
	한 민 구	서울대학교 교수	전기공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장
	이 태 식	한양대학교 교수	토목공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장
간사위원 (1)	박 병 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기획본부장	경 제 학	종합조정지원단장

□ 사업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52명)

① 원천·공공·복지연구사업심의위원회(14명)

구 분	성 명	현 직 책	전 공	비 고
위 원 장 (1)	이 혜 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수 학	국과위 운영위원
위 원 (13)	이 제 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의 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황 우 석	서울대학교 교수	수 의 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박 효 근	서울대학교 교수	식물육종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김 원 배	동아제약(주)연구소장	약 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조 현 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 산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주 수 중	LG이노텍(주)시스템 연구소장	기계공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이 흥 금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미생물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김 공 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부장	토목공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황 정 남	연세대학교 교수	물 리 학	나노기술전문위원회
	서 진 호	서울대학교 교수	화학공학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
	박 용 원	명지대학교 교수	토목공학	원천기술 평가소위 위원장
	신 재 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위원	핵 공 학	공공기술 평가소위 위원장
	최 윤 재	서울대학교 교수	동물 생물공학	복지기술 평가소위 부위원장

②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12명)

구 분	성 명	현 직 책	전 공	비 고
위 원 장 (1)	차 창 룡	서울대학교 교수	미생물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위 원 (11)	한 민 구	서울대학교 교수	전기공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이 종 욱	유한양행중앙연구소장	약 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한 영 철	삼성탈레스(주) 전무	계산통계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신 미 남	퓨얼셀파워(주) 대표이사	재료공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김 은 경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장	화 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김 재 곤	대우종합기계(주) 중앙연구소장	재료공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채 연 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부장	항공우주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신 용 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진공기술센터장	물 리 학	나노기술전문위원회
	정 선 종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 교수	통 신	우주개발전문위원회
	이 정 재	서울대학교 교수	농업토목	단기산업 평가소위 위원장
	황 경 현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부장	기계공학	중장기산업 평가소위 부위원장

③ 연구기반조성사업 심의위원회(12명)

구 분	성 명 (연령)	현 직 책	전 공	비 고
위 원 장 (1)	손 욱	삼성종합기술원장	기계공학	국과위 운영위원
위 원 (11)	석 영 철	산업기술재단 연구위원	경 제 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이 형 우	동국대학교 교수	정 책 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이 장 우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물 리 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구 현 숙	연세대학교 교수	생 화 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이 세 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부장	물 리 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안 규 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기획부장	환경공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이 효 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금속공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김 성 태	LG전자기술원 상무	금속공학	나노기술전문위원회
	노 오 현	서울대학교 교수	항공우주	우주개발전문위원회
	정 해 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영 양 학	국립보건연구원장
	이 종 일	재)송도테크노파크 본부장	경 제 학	환경조성 평가소위 위원장

④ 연구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14명)

구 분	성 명	현 직 책	전 공	비 고
위 원 장 (1)	김 학 수	서강대학교 교수	언 론 학	국과위 운영위원
위 원 (13)	이 태 식	한양대학교 교수	토목공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김 상 국	경희대학교 교수	경 영 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박 영 준	서울대학교 교수	전기공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이 충 은	성균관대학교 교수	분자면역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이 혜 경	IUT 환경(주) 대표이사	환경공학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곽 성 신	우리기술투자(주) 대표이사	경 영 학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인 소 란	니츠(주) 부사장	전 자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김 두 식	연세대학교 교수	생 화 학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
	구 상 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물 리 학	우주개발전문위원회
	오 세 화	한국화학연구원 응용화학연구부장	응용화학	국립연구기관 평가소위원장
	류 재 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미생물학	기초연구기관 평가소위원장
	김 계 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경 영 학	산업연구기관 평가소위원장
	임 정 순	경기대 교수	토목공학	공공연구기관 평가소위원장

[별첨3]

심의 주안점

■ 심의기준(연구개발사업-계속사업)

심 의 항 목	심 의 기 준
I.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1.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 정도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과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정도
2.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 경제·사회적, 과학기술적 주요환경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의 조정 정도
II.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1. 사업선정의 전략성	○ 부처의 임무 및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 선정의 측면에서의 전략성 정도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는 하위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도
3.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도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공동연구 또는 민간참여의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등 - 범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간 역할 및 범부처적 운영체계가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 제시된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 정도
III. 예산운용의 적정성	
1.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정도
2. 자원분담의 합리성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비추어 민간참여 역할의 적합성 정도 ○ 계획년도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율의 적정성 정도
3. 지원방식의 적절성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 해당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심 의 항 목	심 의 기 준
Ⅳ.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 능력측면의 실현가 능성	○ 계획년도의 인력/시설 확보 방안의 현실성 여부와 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2.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 현가능성	○ 기존의 연구성과를 감안할 때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 는 잠재력 정도
Ⅴ. 조정사항	
1.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 성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 할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2. 전년도 심의결과의 반영 정도	○ 전년도 사전조정 심의결과를 계획년도 사업내용에 충실 히 반영한 정도
3. 조사·분석·평가 결과	○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사업의 평가 결과 반영

■ 심의기준(연구개발사업-신규사업)

심 의 항 목	심 의 기 준
I. 사업추진의 필요성	
1. 정부지원의 타당성	○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민간을 대신하여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 여부
2. 사업목표 및 내용의 중복 여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기존 및 타 신규사업과의 중복 여부
3.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 국내외 주요 환경 및 연구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 정도
II.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1.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 정도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과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정도
2.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 경제·사회적, 과학기술적 주요환경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의 조정 정도
III.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가능성 정도	
1.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계획사업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과학기술인력양성, 기술개발촉진 등 기대되는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2.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계획사업을 통해 나타날 고용증대, 산업경쟁력 제고, 산업기반조성효과, 공공복지향상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3. 정책목표달성의 기여도 및 타 사업에의 파급효과	○ 계획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목표 달성도 및 기존의 추진사업에 미치는 기여도 정도

심 의 항 목	심 의 기 준
Ⅳ. 사업목적 및 추진 내용의 적절성	
1. 사업선정의 전략성	○ 부처의 임무 및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 선정의 측면에서의 전략성 정도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는 하위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도
3.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도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공동연구 또는 민간참여의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등 - 범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간 역할 및 범부처적 운영체계가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 제시된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 정도
Ⅴ. 예산운용의 적정성	
1.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정도
2. 자원분담의 합리성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비추어 민간참여 역할의 적합성 정도 ○ 계획년도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율의 적정성 정도
3. 지원방식의 적절성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 해당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Ⅵ.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 계획년도의 인력/시설 확보 방안의 현실성 여부와 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2.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 기존의 연구성과를 감안할 때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 정도
Ⅶ. 조정사항	
1.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성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 심의기준(연구기관지원사업)

심 의 항 목	심 의 기 준
I.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1.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 정도	○ 계획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과 부처/기관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정도
2.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 경제·사회적, 과학기술적 주요환경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의 조정 정도
3. 기관임무의 적절성 및 부합성	○ 해당기관 계획사업의 기관 임무 및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정도 ○ 기관 임무 및 설립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사업목표, 추진 시기 등의 적절성 정도
II.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1. 사업선정의 전략성	○ 기관 임무 및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 선정의 측면에서의 전략성 정도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는 하위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도
3.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도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공동연구 또는 민간참여의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등
4. 사업기획 및 관리의 합리성	○ 연구사업이 합리적으로 기획되었는지 여부와 사업관리 절차 및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구성되었는지 여부
5.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 제시된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 정도

심 의 항 목	심 의 기 준
Ⅲ. 예산운용의 적정성	
1.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정도
2. 자원분담의 합리성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비추어 민간참여 역할의 적 합성 정도 ○ 계획년도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율의 적정성 정도
3. 지원방식의 적절성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 해당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방식의 적절성 검토 -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4. 예산배분의 적절성	○ 기관의 임무와 설립목적에 비추어 기관고유사업, 일반사 업 등 비목별로 예산배분이 적정한지 여부 ○ 기관의 임무와 설립목적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예산배분 의 적정성과 년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정도
Ⅳ.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 능력측면의 실현가 능성	○ 계획년도의 인력/시설 확보 방안의 현실성 여부와 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2.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 현가능성	○ 기존의 연구성과를 감안할 때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 는 잠재력 정도
Ⅴ. 조정사항	
1.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 성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 할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2. 전년도 심의결과의 반영 정도	○ 전년도 사전조정 심의결과를 계획년도 사업내용에 충실 히 반영한 정도
3. 조사·분석·평가 결과	○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사업의 평가 결과 반영